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Incheon :
Focus on the Analysis of Policy and Environment

배 은 주 · 최 민 아

연구진

연구책임

- 배은주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 최민아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
-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 배경과 목적

- 인천광역시에서는 2013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됨.
-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현재의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와 방법

-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하고, 사례 검토 부분은 외국 주요 국가와 서울, 경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였고, 평생교육 환경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범위 내에서 진행함.
- 평생교육의 개념 및 평생교육 법과 국가정책의 변천을 검토하고 외국의 평생교육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분석하고, 인천시 평생교육의 일반 환경과 평생교육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3.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환경 분석의 특징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노인 인구, 여성인구, 다문화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

며, 장애인 인구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음.

- 인천시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낮음.
- 서비스판매직과 주부의 비중이 크고, 무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저소득계층이 비중이 큰 편이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일반회계 대비 평생·직업교육 예산 비중이 서울, 경기보다 적으며, 평생학습도시들이 비지정도시들보다 높은 비율의 평생학습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1년 조사 기준 인천에는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25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360개,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375개로 총 760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 프로그램 수는 7,869개이며, 학습인원은 816,088명으로 집계됨.
- 기타 평생교육기관 중에서는 주민자치기관과 도서관, 복지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천의 기타 평생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학점은행제나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는 기관도 적은 편이며,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도 8개에 지나지 않음.
-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분야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약 35%에 이르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노인임.

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정책 분석의 특징

- 인천광역시는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용진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역평생교육협의회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

였는데, 시청의 각 실국 내의 평생교육 유사 업무의 네트워크 구축과 마인드 제고는 여전히 미흡하여 교육지원담당관 내 평생교육팀의 위상 제고와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제고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실현되었으나 독립법인형이 아니고 규모가 작아 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성화 과제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청과 교육청 간의 평생교육 업무 협력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서는 권역 및 세계 평생교육 기관 연계 발전과 권역별 평생학습벨트 조성 및 특성화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평생학습도시들 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노인교육이나 여성 및 다문화교육, 장애인 교육의 활성화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며,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최근 주장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5.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 인천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 둘째,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셋째,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넷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과 특성화, 다섯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적·물적 기반 구축, 여섯째, 평생교육 추진 체제 간 역할의 차별화, 일곱째, 평생교육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증대, 여덟째, 평생교육복지의 미래 비전 구현 등을 제시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다음 8가지를 제안하였음.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으로, 첫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

의 프로그램 제공,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 노인 평생교육의 강화 등을 제안함.

-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 공고화로, 인천시 교육기획관 내 평생교육팀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평생교육 전문 인력 선발과 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업무 전담 부서와 평생교육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함.
- 평생교육 추진체제 간 역할 구분과 연계 협력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구분과 협력, 시청과 교육청의 역할 구분과 협력 등이 필요함.
-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로, 이를 위한 인천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도시개발 정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로, 거주 마을이 재개발 또는 재구조화될 때 필요한 평생학습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로, 우수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천의 평생교육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고등평생교육 그리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함.
- 평생교육 전문 인력 선발과 활용으로, 평생교육기관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주기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인천의 변화하는 여건에 적절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평생교육기관들의 전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와 한계	4
2. 연구방법	5
3. 연구진행 흐름도	6
제2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 동향	9
제1절 우리나라 평생교육 법과 정책 동향	9
1.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9
2. 국가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검토	19
제2절 외국과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동향과 시사점	39
1.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동향	39
2.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 사례	49
3. 외국과 타시도 사례의 시사점	57
제3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환경	63
제1절 인천광역시 일반 환경	63
1. 인구학적 특성과 평생교육	63
2. 산업구조 특성과 평생교육	75
제2절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추진 체제 및 인프라	80
1. 평생교육 업무 추진 체제	80
2. 평생교육기관 현황	82
3.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88

제4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정책	95
제1절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적 지원체제	95
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지원체제	95
2.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지원체제	98
제2절 평생교육 추진 정책	101
1. 제1차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101
2. 인천광역시청 및 시교육청 평생교육 사업	105
3.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사업	112
제5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121
제1절 정책적 시사점	121
제2절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125
[참고문헌]	131

- 표 목 차 -

<표 2-1> 1999년 평생교육법 주요 내용	10
<표 2-2>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 주요내용	13
<표 2-3> 시도별 평생교육 전담기구 현황	19
<표 2-4> 제 1, 2,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교	38
<표 2-5> UIL 중장기 전략의 전략적 목표(2008-2013)	40
<표 2-6> UIL 중장기 전략의 임무와 목표(2014-2021)	41
<표 2-7> 서울시 평생교육 환경 SWOT 분석	51
<표 2-8> 서울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의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53
<표 2-9> 경기도 평생교육 환경 SWOT 분석	55
<표 2-10>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56
<표 3-1>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 변화	63
<표 3-2> 인천시 군구별 인구 현황(2014)	65
<표 3-3> 인천시 군구별 노인인구 변화	67
<표 3-4> 인천시 연령별 여성인구 현황(2014)	69
<표 3-5> 인천시 군구별 여성인구 수 변화	70
<표 3-6>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인구현황	72
<표 3-7>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변화	74
<표 3-8> OECD와 우리나라 및 인천시의 평생교육참여율 비교	75
<표 3-9> 인천시 직업구조 현황(2014)	76
<표 3-10> 인천시 월평균 소득 현황(2013)	78
<표 3-11> 인천시 연령별 실업률 추이	79
<표 3-12>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 및 직원 현황(2014)	80
<표 3-13> 인천시 평생교육 예산현황	81
<표 3-1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기관 기본 현황(2011)	83

<표 3-15> 인천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현황(2014)	84
<표 3-16>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수 기관 현황(2011)	85
<표 3-17>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수 기관 현황(2011)	86
<표 3-18> 평생학습관 지정 기관 현황(2011)	87
<표 3-19> 학점제 운영 지정 평생교육기관 현황(2011)	88
<표 3-20>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	89
<표 3-2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	90
<표 3-22>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비 부담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1) ..	91
<표 3-23> 학습계좌제 인증 프로그램 현황(2011)	92
<표 4-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세부 내용	95
<표 4-2>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9
<표 4-3>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99
<표 4-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102
<표 4-5> 인천광역시청 평생교육 추진 정책(2014)	106
<표 4-6> 2014 인천시 평생교육 사업 개요	107
<표 4-7>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추진계획(2014)	109
<표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사업(2014)	111
<표 4-9> 인천광역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주요 업무 계획(2014)	113
<표 4-10> 인천광역시 비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주요 업무계획(2014)	116

- 그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5
<그림 2-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	17
<그림 2-2> 제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비전도	22
<그림 2-3>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비전도	28
<그림 2-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전도	33
<그림 2-5> 제3차 기본계획의 평생교육 추진 체계도	34
<그림 3-1> 2000년-2040년 인천광역시 인구 변화 추이	64
<그림 3-2> 인천시 2014년도와 2040년의 인구변화 모형	64
<그림 3-3> 인천시 연령별 인구 분포 비율 현황(2014)	66
<그림 3-4> 인천시 군구별 인구 분포율(2014)	66
<그림 3-5> 2001-2014년도 인천시 노인인구 변화	67
<그림 3-6> 인천시 자치구별 노인인구 분포율(2014)	68
<그림 3-7> 2001-2014년도 인천시 여성인구 변화	70
<그림 3-8> 인천시 군구별 여성인구 분포율 현황(2014)	71
<그림 3-9> 2001-2014년 인천시 다문화인구 변화	72
<그림 3-10>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인구 분포율(2014)	73
<그림 3-11> 2008-2012년도 인천시 장애인인구 수 변화	74
<그림 3-12>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분포율(2014)	75
<그림 3-13> 인천시 산업구조 현황(2014)	77
<그림 3-14> 인천광역시 월평균소득 현황(2013)	78
<그림 3-15> 전국 및 인천시 실업률 비교	79
<그림 3-16> 인천시 평생학습관 지정 기관 비율 현황(2011)	87
<그림 3-17> 인천시 학점제 운영지정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88

<그림 3-18>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89
<그림 3-19> 교육비 부담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91
<그림 3-20> 인천시 학습계좌제 인증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92
<그림 4-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조직도(2014)	98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Inche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의 상대성,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폭발적인 지식의 양 증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세계화 시기 고용의 유연성 확대 등으로 인해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학령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생의 과업으로 변모되었다. OECD나 World Bank 등 국제사회에서도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과 복지의 증대 및 연계의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해진 지식기반사회에서 행복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평생교육의 이념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인력개발, 복지증진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배은주, 2013).

인천광역시에서도 2013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개관하며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천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2014년도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사업 진행이 요청된다.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은 제1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때와는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새로운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정책의 변천과 더불어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판적 검토 및 현재의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2차 인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평생교육의 현실 여건 진단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 정책이 초래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와 한계

1) 공간적 범위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 및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하고, 사례 검토 부분은 외국 주요 국가와 서울, 경기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평생교육 환경은 인천광역시 및 군구의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2) 시간적 범위

되도록 2014년 위주의 최근 자료를 위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과거의 자료를 검토한다.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자료는 공식적으로 입수 가능한 공인된 조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1년에 인천시청에 의해 조사된 평생교육DB를 토대로 분석한 배은주(2013)의 보고서 내용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 평생교육DB 자료도 조사의 한계로 인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된 활용가능한 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계를 감안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후 보다 정확한 조사자료가 생성되어 많은 연구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내용적 범위

평생교육의 개념 및 평생교육 법과 국가정책의 변천을 검토하고 외국의 평생교

육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 및 타시도의 정책 사례 검토하여 시사점을 분석한다. 인천시 평생교육의 일반 환경과 평생교육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제2차 인천시평생교육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으로, 인천시 평생교육의 정책과 환경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므로, 실제 평생학습자인 수요자 욕구조사와 평생학습기관의 실태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배제하였기에 세부적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추후 여러 조사 연구가 뒷받침되어 활성화 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평생교육의 개념과 평생교육법 및 국가 정책의 변천과정, 주요 외국 및 타시도 평생교육 사례, 인천광역시 제1차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발전계획 및 인천시 교육기획관 평생교육팀 연도별 추진계획 등의 검토는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2) 통계자료 분석

인천시 평생교육 일반 환경과 평생교육 환경은 통계청과 인천통계 등을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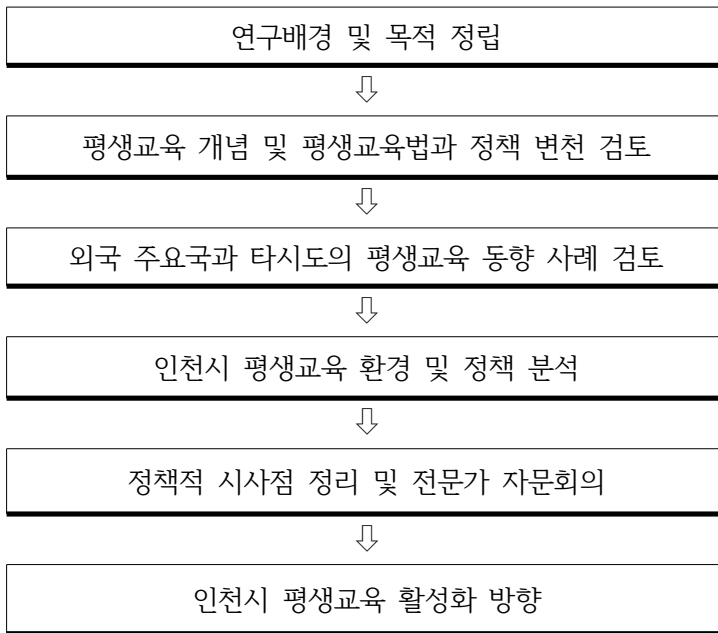
3) 전문가 자문회의

평생교육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천시 평생교육 환경 및 정책 분석의 시사

점과 향후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연구진행 흐름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Incheon

제2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 동향

제1절 우리나라 평생교육 법과 정책 동향

제2절 외국과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동향과
시사점

제2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 동향

제1절 우리나라 평생교육 법과 정책 동향

평생교육은 문자 그대로는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랑그랑(Lengrand, 1975, p.50)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적,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성장 발달을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시키는 데 있으며, 이러한 평생학습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제2조 참고). 이러한 법률적 의미 규정 때문에 흔히 평생교육을 ‘학교 밖 교육’으로 개념화하고 있기도 하다.

1.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1980년 10월에 공포된 새 헌법 제29조(현재는 제31조)에서 평생교육의 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였고,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1982년에 사회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다시 1999년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을 개칭하였고, 이후 2007년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평생교육법의 변천

(1) 1999년 평생교육법

우리나라 최초의 평생교육법은 1990년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종전 사회교육법의 전면 개정으로서의 평생교육법은 헌법의 평생교육 조항을 근본 이념으로 하여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협소한 사회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법명의 개칭을 통하여 사회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자 하며, 일제잔재로부터의 탈피, 평생교육개념의 포괄성 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양흥권, 2008, pp.112-113).

<표 2-1> 1999년 평생교육법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개념 규정	제2조 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 평생교육시설이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 교육 진흥	제10조 평생교육협의회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임무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규정 제11조 경비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제12조 지도 및 지원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연수 실시 규정 제15조 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과정을 적극 개발 하도록 규정

영역	주요 내용
	<p>제16조 인적자원의 활용 각급학교,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제도 운영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 도입, 운영</p>
평생교육전담기구	<p>제13조 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p> <p>제14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정보제공, 평생학습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p>
평생교육사	<p>제17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및 평생교육사의 수행업무 규정</p> <p>제18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한 기관에 관한 사항 규정</p> <p>제19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규정</p>
학교평생교육	<p>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 평생교육 실시자에게 평생교육시설을 제공해야 함.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대학의 장이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각급학교는 평생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평생교육법 참고.

하지만, 이후 7여 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의 개선을 위해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9년 제정 평생교육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양흥권, 2008, pp.113-114).

첫째, 평생교육법은 법적 성격과 지위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평생교육은

모든 교육의 개념을 포괄하는 우산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은 이 같은 광범위한 영역의 교육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

둘째, 평생교육법은 법 목적과 개념 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법 목적 진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는데, 사회교육법에도 있었던 평생교육법 제1조 법 목적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상실되었다. 이는 법 목적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의 부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셋째, 가장 실제적인 문제점은 평생교육법이 국가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구축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국가의 평생교육 담당기구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였고, 광역 시도 단위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평생교육 추진체제는 제대로 된 규모와 위상을 갖지 못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넷째, 국가의 종합적인 평생학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국가의 종합적인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 정책과 부처 간의 평생학습 업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을 핵심사안 중 하나로 추진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교육법 제12조 마저 삭제되어 평생교육법 관장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역할 축소와 함께 교육부 소관 평생교육 업무로 축소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다섯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인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 배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하면 질적 성장이 미흡한 것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문인데, 2004년 당시까지 대학 및 양성기관의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36,466명의 평생교육사(사회교육전문요원 포함)가 배출되었지만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비해 전반적인 배치 현황은 정확한 통계조사 확인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었다.

여섯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웠다.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대상, 전국평생학습축제 등은 우리나라를 평생학습국가로 전이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개념 규정에 관한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기구와 추진 행정체제에 관련된 조항,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조항, 각급 학교에서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조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흥권, 2008, pp.116-124).

<표 2-2>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 주요내용

영역	주요 내용
개념 규정	<p>제2조 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함.</p> <p>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p>
평생교육진흥	<p>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규정</p> <p>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평생교육진흥정책 관련 사항 심의</p>

영역	주요 내용
	<p>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각 시도지사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p> <p>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p> <p>제13조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이나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청 가능</p> <p>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설치</p> <p>제15조 평생학습도시 사업,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련 내용 규정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규정,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p>
<p>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임무</p>	<p>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습자의 평생교육 경비보조,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경비 지원</p> <p>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정보화와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규정과 강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 규정</p> <p>제23조 학습계좌제 도입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p>
<p>평생 교육 전담 기구</p>	<p>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규정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며 진흥원은 법인으로 함.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종사자의 양성과 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지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의 통합관리 등으로 정함.</p> <p>제20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규정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임무는 지역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p>

영역	주요 내용
	<p>제21조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 규정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p>
평생교육사	<p>제24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에 관한 사항 규정 및 평생교육사의 수행업무 규정</p> <p>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양성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함.</p> <p>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규정으로 학교장이 학교평생교육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채용,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p> <p>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 경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 소요 경비 보조</p>
평생교육기관 설치	<p>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평생교육기관 설치가 가능한 주체의 자격조건 규정,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 공제사업가입에 대한 규정 추가</p>
학교평생교육	<p>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등학교장이 학교평생교육을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에서 개발방향 규정,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 직접 운영,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 실시, 학교평생교육에 학교시설 활용, 학교개방에 필요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규정</p> <p>제30조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각급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대학의 장이 평생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설 갖출 것 규정</p>
문해교육	<p>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실시 의무 규정, 교육감 관할 관내 초중등학교에서의 문해교육실시, 지자체와 법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정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 규정</p>
학점, 학력 인정	<p>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점, 학력 인정, 인정 예시</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평생교육법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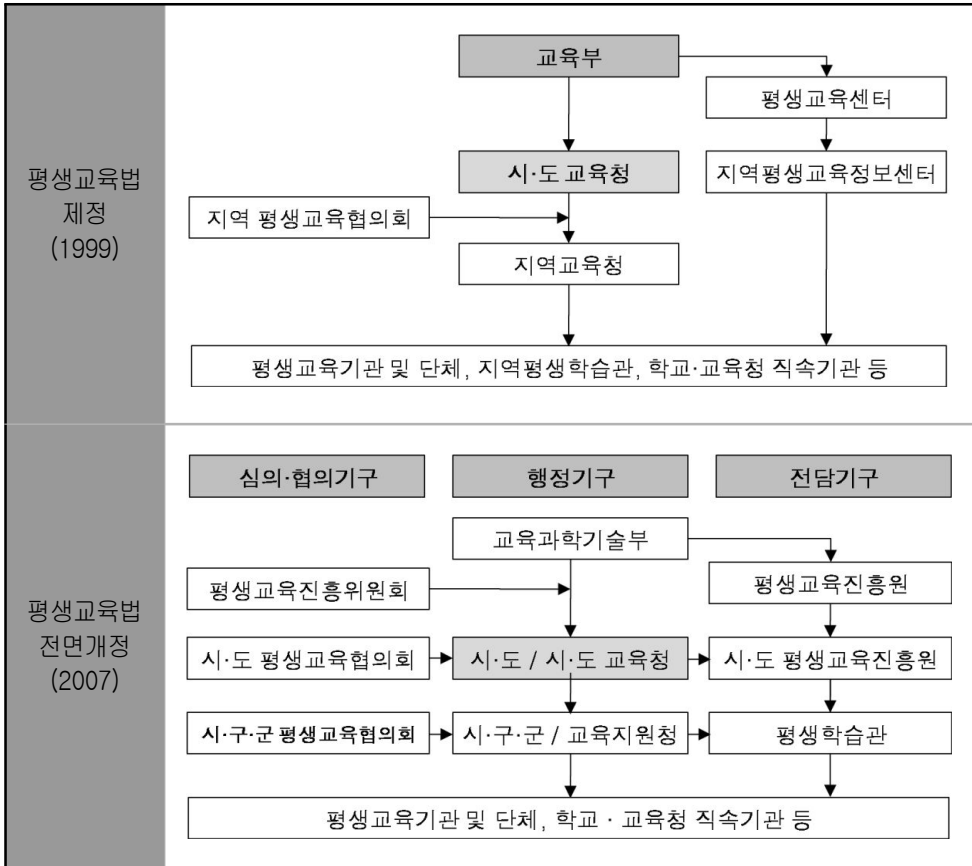
2)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 개정된 1999년 평생교육법은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담 및 지원기구로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평생교육은 교육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였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식기반사회, 창조사회, 고령사회로 대변되는 시대 상황을 포괄하여 구현하기에는 평생교육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와 체계가 제한적이었다(최은수, 2012). 이에 시대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이 2007년에 다시 실시되었다.

개정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평생교육 관련 제도와 영역을 구체화하여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평생교육 시행의 중추기관이 되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고,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협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평생교육 추진기구의 실질적 지배구조가 교육감 이하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의 단일 추진체제에서 시·도지사 및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복수체제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이충렬 외, 2009).

이상과 같은 1999년 평생교육법과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이정석·임호(2013), p.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2-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

이처럼 2007년 개정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전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사업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의 주체로 기능하게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광역급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고,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시·군 자치구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자치구협의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개정 전에는 교육감 소관 하에 있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전환하여 일반행정의 평생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와 책무를 강화하였다.

둘째, 평생교육진흥원(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으로 평생교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책무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종합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종사자의 양성과 연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학점인정과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서비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이전에는 분산·운영되었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통합하게 됨으로써 국가 수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수준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학습관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전담 지원 기구의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분산·처리되었던 평생교육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운영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고,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 지원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최은수, 2012).

하지만, 개정 평생교육법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기구의 이원화로 인한 한계이다. 개정 평생교육법에서도 기존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및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이정석·임호, 2013, p.28). 따라서 긴밀한 연계·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평생교육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자율권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설치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과정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흥권, 2008, p.128). 실제로 17개 시·도의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2-3> 시도별 평생교육 전담기구 현황

지역	평생교육 전담기구(수탁기관)	출범시기
서울	지정·운영(서울연구원)	2014.04
부산	지정·운영(부산인적자원개발원)	2011.07
대구	지정·운영(대구경북연구원)	2012.05
대전	독립 재단법인 운영(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1.07
울산	지정·운영(울산발전연구원)	2012.09
인천	지정·운영(인천인재육성재단)	2013.05
광주	지정·운영(광주발전연구원)	2013.04
강원	지정·운영(강원발전연구원)	2014.03
경기	독립 재단법인 운영(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1.12
경북	지정·운영(대구대학교)	2013.06
경남	-	-
충북	지정·운영(충북발전연구원)	2011.04
충남	지정·운영(충남인재육성재단)	2012.01
전북	-	-
전남	지정·운영(전남발전연구원)	2014.03
제주	지정·운영(제주발전연구원)	2012.07
세종	-	-

자료: 시·도별 홈페이지 검색 2014. 8.12.일 기준

2. 국가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검토

현재까지 제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종합계획은 2002년 ~ 2006년, 제2차 종합계획은 2008년 ~ 2012년까지였으며, 제3차 종합계획은 2013년 ~ 2017년까지 적용된다. 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의 변천을 통해 국가평생

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고, 이를 비교 검토해 본다.

1) 제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2년~2006년)¹⁾

제1차 종합계획의 원 제목은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으로서, 글로벌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연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수립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립배경

첫째, 지식기반사회와 평생학습사회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시대가 도래하였다.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국가인적자원개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일한 과제이므로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평생학습을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촉진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출산을 저하와 수명 증대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평생학습에 대한 획기적인 수요 증대를 위해 평생학습복지 증진, 사회적 통합성 증진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셋째, 정보화와 지식화의 심화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민주시민사회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성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균형 있는 평생학습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넷째, 글로벌 평생학습사회 건설 노력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정책이 요구된다.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21세기를 지식사회, 평생학습의 세기로 규정하고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맞추어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1)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의 내용을 요약함.

수립·추진하고자 한다.

다섯째,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과 연계된 평생학습분야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평생교육 관련 집단들 간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21세기 지식사회에 맞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열린 교육,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통한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비전과 추진전략

제1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설정되었고, 다섯 가지 추진방향과 네 가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비전도는 <그림 2-2>와 같다.

(3) 세부 추진과제

제1차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가.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지역화

첫째, 학습의 즐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한다.

둘째, 지식사회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서 평생학습 마을/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살리기/지역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한다. 시·군·구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활동의 연계 및 지역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 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학습과 토의 문화를 활성화하여 민주시민 사회 형성에 기여한다.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참고.

<그림 2-2> 제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비전도

넷째, ‘주 5일 근무제’가 학습기회의 확대로 이어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아동과 성인이 공유하는 복합시설로 재구조화 하여 지역평생학습의 전당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포스터, 전자매체, 이벤트,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평생학습 캠페인 및 홍보 운동을 전개한다.

나.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지원 강화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여성, 중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저학력층, 비문해자 등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소외계층의 자활기회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일반고와 방송고 학생의 교류체제를 구축하여 일반고 부적응학생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적 관리 도모 및 대안학교로서의 기능 수행한다.

셋째,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고령자 층의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보다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의 노인교육에 중점을 두는 선진국형 노인정책으로 전환한다.

넷째, 여성을 평생학습의 주 대상자이자 주체로 인식하여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여성 평생교육의 중복기능을 조정하고 평생교육법과 연계하여 여성 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국민 신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을 전개한다. 문해의 고도화 및 다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OECD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실태 조사,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문해교육 실시 및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기초 역량 함양에 기여한다.

여섯째, 민주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한다.

일곱째, 퇴직 전문직을 활용한 평생학습 자원봉사를 교육, 복지와 결합하여 자발적 평생학습활동을 촉진시킨다.

다.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성인교육기회 확대

첫째,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학위 취득과 연계함으로써 능력위주의 학습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둘째, 원격대학 설치 확대 및 운영을 내실화한다. 원격대학 진학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능 수행 등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셋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산·학·관 상호간의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체 종사자에게 재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계좌제 도입을 준비한다. 교육계좌제를 통해 개인학습자들의 교육경력 개발·관리를 체계화하여,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 차원의 성인교육력 증진을 도모한다.

라.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일터의 학습조직화

첫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을 확충하여 성인 평생 작업능력개발 지원을 도모한다.

둘째, 사내대학이 적응력이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제도 및 학습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 완화,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등 유사 제도와의 연계 통합 방안, 사내대학 운영과정의 다양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셋째, 기술계학원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마. 평생학습기반 구축

첫째, 평생교육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배치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 분야의 휴먼웨어 구축,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

둘째, 평생학습자의 다양한 유형과 요구에 근거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Pool 제공 및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각종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상호간의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원하는 국민에게 One-Stop으로 제공한다.

넷째, 학습희망자들에게 각종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평생학습 상

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수준에서의 평생교육 전용 공간이 요구되므로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 전용공간의 확보와 시설·설비를 현대화한다.

여섯째, 재직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의 유·무급 학습휴가를 허용하고, 주 5일 근무제 및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일곱째,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이 중앙 수준, 광역자치단체 수준,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2)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년~2012년)²⁾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이 2006년으로 종료되고 평생교육법이 2008년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적인 연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의 수립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배경

첫째,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종료 후 제1차 계획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 2차 후속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

둘째,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은 평생교육 유관 법령상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라 중앙-지역 단위에서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교육=자격’ 체제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셋째, OECD, World Bank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평생학습이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생전략으로 평생학습 종합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개념을 채택하여 지역수준에서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2)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내용을 요약함.

지역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학습, 고용, 복지, 문화’를 연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2) 정책 환경 진단

가.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분석

평생학습은 학령기에 놓친 교육 기회를 보상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환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한 새로운 교육 문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명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첫째, 사회·경제패러다임이 지식경제 시대를 넘어서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시대가 대두 되었다. 또한 3차 산업 중심에서 창조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D, 출판, 소프트웨어 등 창조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 될 전망이다. 따라서 창조적 지식 근로자 양성을 위해 일터의 학습조직화와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패러다임이 저출산·고령화·도시화사회로 변화되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평생학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노령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도시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 가진 평생학습의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간, 도시내 네트워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사회통합형 국가 전략으로서 평생학습은 강조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은 여성, 노인,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사회 평생교육에서 배제 될 위험을 줄여서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하는 국가 안전망 전략 및 사회적 안전밸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과 세계적으로 인정·통용될 수 있는 교육체제·인증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평생학습 자원 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은 학교졸업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부단히 계속되는 평생활동이다. 학습자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학습생활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되며 교사는 지식을 배우는 학습능력과 학습습관의 형성을 도와주는 전문가 역할을 해야 한다.

나. 생애단계별 학습자 분석

성인의 생애주기별 생활시간 변화 시점에 발생하는 생애사적 사건에 따라 평생 학습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 한다.

다. 정책영역별 현황 분석

‘자아실현’, ‘고용가능성 증진’,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보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충족된 삶, 양질의 노동력 창출, 민주주의 발전을 달성한다. 그러므로 각 영역에서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과 요구 현황의 격차를 줄여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평생학습정책추진이 요구된다.

(3)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체제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및 과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비전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참고.

(4) 중점 추진과제

가. 생애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첫째,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운영하여 성인 전기 및 성인 중기 학습자 중심의 ‘개방형 계속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학령기 청년층 중심의 대학체제와 구별되는 성인학습자 생활패턴 및 요구에 맞추어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패러다임 개편을 유도한다.

둘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을 구체화한다. 생애 제2전환기, 성인후기, 성인완성·정리기에 대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은퇴기 이후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형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서 ‘환경 변화 적응’ 및 ‘세대 간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셋째, 특성화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평생학습 중심 전문대학」운동을 활용한 일터와 학습의 연계를 강화한다. 고졸 경력자들의 전문대학 입학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를 통한 진학취업 병행 활성화를 통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력을 양성한다.

넷째, 재직자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 학원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 민간 시장의 경쟁 체제를 통한 자율성, 창의성 있는 평생·직업교육기관을 발굴·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연계를 통한 교습과정의 전문성 강화 및 학원 담당 강사의 연수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센터로서의 학교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여섯째, 지역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군 e-러닝 포털 서비스 체제 운영 및 군 복무 중 교육 이수자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평생학습의 사각지대였던 군 평생학습을 활성화 한다.

나.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참여 및 연계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가능성 증대를 위한 지역사회 평생학습과 고용의 연계 강화 및 총괄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급 등 「평생학습복지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안정망을 구축 및 운영한다. 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를 바라보는 톨레랑스(관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및 확대 한다.

셋째,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체계화 및 실질화 한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안적 학력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 인권교육, 평화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타 부처와 연계한 시민교육영역에 자원봉사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소규모 평생교육관련단체를 법인화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위원회」의 연계를 통한 중앙단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 평생교육 관련기관 협력·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한다.

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첫째, 평생학습 지원추진체제 개편을 통해 정책 총괄·조정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단위, 시·도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지역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을 육성한다.

둘째,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확보 및 배치를 실질화한다.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의 체제 개선을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배치·활용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우수한 평생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연수에서 자율적 연수체제로 개편한다.

셋째, 평생학습도시 지정확대로 지자체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촉진한다. 전국 기초지자체 대비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는 도시간 경쟁체제를 유지한다.

넷째, 평생교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가평생교육정보망으로서 「국가평생학습지도」를 구축한다.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DB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비교를 위한 평생교육통계조사의 표준화 및 국제화를 추진한다.

다섯째,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의 연계로 교육훈련, 자격, 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를 구현한다. 산업계 중심의 산업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직 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국가자격체제와 연계한 학습계좌제를 단계적으로 구축 및 운영한다.

여섯째,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포럼 유치 및 공동연구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평생학습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확대한다. Glocal 평생학습축제의 지역화·세계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학습도시 사업의 성과와 정보공유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일곱째, 즐거운 학습문화 확산을 통해 평생학습을 내재화 및 생활화 한다. 「평생학습의 날」, 「평생학습주간」 제정으로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방송(EBS)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전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³⁾

제1차와 제2차에 이어 정부는 2013년부터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 배경

첫째, ‘국민행복 실현’을 지원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가 개막하였다. 국내 총생산(GDP)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국민행복지수로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되어 국민의 행복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둘째,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지식에서 창조성으로 이동하는 창조경제시대로 진입 하였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생태계

3)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조성이 요구되고, 전일제에서 시간제 활성화로의 사회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끄는 유연한 평생 학습 기반 구축 마련이 필수가 된다.

셋째, 국제 지위와 경제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이다. 국가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민의 삶의 수준 변화 미미하고 계층간·세대간 삶의 질 격차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이 하위에 머물고 있다.

넷째,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에서의 성인 학습자 참여격차가 심각하다. 세대간 학력 격차, 경제적 이유 등으로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학습자의 세대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다섯째, 100세 시대 인생후반기 교육체제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학습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인생후반기 여생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

(2) 현황 진단

첫째, 다양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법 개정, 제1·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시행을 통해 평생학습참여율이 08년 26.4%에서 12년 35.6%로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OECD 평균 40.4%보다 약 5% 낮고, 조사대상 27개국 중 19위를 기록하였다.

둘째, 세대간·지역간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맞춤형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 평생학습추진체제 정비를 통한 다양한 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졸이하평생학습 참여율은 08년 14.9%에서 12년 22%로 증가, 저소득층 평생학습 참여율은 08년 21.9%에서 12년 30.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저학력 성인, 소외계층 등 일부에 국한된 정책으로 소득·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월소득 15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각각 30.1%, 44.1%로 14%차이가 나고,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각각 22.0%, 40.9%로 18.9%차이가 난다.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분야간 균형성과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다. 평생교

육기관 수 및 프로그램 수 증가로 08년 107,348개에서 12년 178,971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현황과 참여희망 분석 결과, 인문교양, 문화예술스포츠 등 존재를 위한 학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참여 등 통합을 위한 학습 과 큰 격차를 보인다.

(3) 비전과 목표 및 추진체계



<그림 2-4>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전도

자료: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참고.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추진 체계로 국가와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추진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 - 시도 및 교육청 - 시·군·구 -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추진체계를 완성하고,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는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진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제3차 기본계획의 평생교육 추진 체계도

자료: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 참고.

(4) 추진과제

가.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첫째,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를 전환한다. 성인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대학을 「성인친화형 열린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자격과정으로 연계·활성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전문

자격 과정에 대한 기회를 확대 하고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창조경제와 창조학습의 융합 센터로서 지역대학을 재설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창조인재를 육성한다. 그리고 대학-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및 학습-고용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역산업 재직자의 계속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 경력, 자격 취득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같은 일정 기준에 의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는 국가역량체계(NQF)를 구축하여 경험학습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또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저학력 성인들의 기초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여 평생학습 이력이 취업 획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첫째,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강좌 정보 등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포털을 제공하고 디지털콘텐츠와 연계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운영하여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위해 온-오프라인 컨트롤 타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구 단위 평생교육 기관에 배치된 담당자를 위한 연수 및 매뉴얼을 제공한다.

둘째,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창조학습도시로 기능을 전환하고, 학습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 간 평생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지역 평생교육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셋째,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평생교육 기관에 정보공시제를 시행하여 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자격검정 등 자격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자격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사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다.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첫째,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청년층에게는 직무능력 향상, 중·장년층에게는 계속교육 구축 및 취·창업 재교육을 지원, 고령층에게는 여가·복지·교육을 융복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여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평생학습 닥터제를 운영하고 현장 직무교육(OJT) 체계화 및 매뉴얼화를 지원한다.

둘째, 사각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성인 문해교육 집중 지원기간을 설정,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확산과 지원 확대를 유도, 문해교육을 통한 초·중등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문해역량을 강화한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는 지역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참여기회 확대하고 자기계발을 지원한다.

셋째,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지원, 여성인력 활용 정보망 구축, 여성 인적 네트워크 및 리더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군인에게는 국방 분야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군복무 및 교육훈련에 대한 학점인정을 확대하고 군 경력의 사회적 인정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을 위해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BS교육과정과 평생학습계좌제를 연계하여 학력취득 활성화를 지원한다.

라. 지역사회학의 학습 역량 강화

첫째,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한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학교 평생교육 사업 개편 및 확대를 통해 학교평생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간 네트워크 사업 구축하고 농어촌 학교를 지역의 교육·문화 중심지로 활용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현재 시행되는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 확대추진을 통해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그리고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과 주민의 참여를 향상을 지원할 역량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지역학습공동체 확산을 지원한다. 주민 스스로 학습 설계를 통한 동아리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지역학습 활성화 및 자발적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창조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 학습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재직자 및 은퇴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생적 학습 활성화 및 취업 지원기회를 제공한다.

4) 국가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검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종합진흥계획의 변천을 보면, 제1차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에 평생학습의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제2차는 생애단계별맞춤형 평생학습 전략을 통해 평생학습의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평생학습 추진체제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제1차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의 제3차 계획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체제와 대학,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고, 일과 학습, 능력을 연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제 1, 2, 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2-4> 제 1, 2, 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비교

구분	제1차 기본계획 (202~206)	제2차 기본계획 (208~2012)	제3차 기본계획 (2013~2017)
비전 및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교육복지국가 (Edutopia) 인적 강국 건설 :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 목표: 자아실현, 경제적 경쟁력,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배우는 즐거움, 일 구어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구현 · 목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 평생학습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평생학습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공생, 공영, 공존하는 공감의 학습사회 · 목표: 모든 국민의 평생 성장, 평생 현역, 평생 이웃
평생교육 정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인적자원부 추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정책과 추진 사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관련 정책 조정
평생 현역 분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평생교육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인생 재도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를 중심으로 자원 봉사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인생 3모작 학습지원 · 6080 골든 시니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직업교육, 훈련기회의 획기적 확충 · 사내대학 설치의 활성화 · 인력개발 산업으로서 기술계 학원 육성 · 원격대학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 시설 활성화 · 유·무급 학습휴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 재직자 평생·직업교육 접근성 증진을 위한 학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학습 생태계조성
평생성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교육 등 성인 기초능력 향상교육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문해역량 증진기반 강화

자료: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p.373.

제2절 외국과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동향과 시사점

1. 외국의 평생교육 정책동향

1) UNESCO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는 1952년 설립된 유네스코 교육연구소를 이어 받아 2007년에 평생학습 연구소로 새롭게 탄생한 곳이다. 유네스코의 비영리, 정책중심, 국제 연구, 훈련, 정보, 문서와 출판을 위한 센터이다. 유네스코의 6개의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서, UIL은 성인 학습과 교육, 특히, 문해와 비형식교육, 소외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학습기회에 초점을 둔 평생학습정책과 실천을 촉진한다.

UIL은 전 세계에 걸쳐 개인과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비형식적 및 무형식적인 모든 형태의 교육과 학습이 인정되고 가치롭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UIL의 임무는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위하여 정책 중심 연구, 역량 구축, 네트워크, 출판물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평화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 다양성 증진, HIV/AIDS 퇴치, 환경 보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UIL은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평생학습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UIL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UIL, 2008).

첫째,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둘째, 새천년 발전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셋째, 성인교육에 대한 국제회의(CONFINTEA) 시리즈의 조정

넷째, 유엔 문해를 위한 10년(UNLD, United Nations Literacy Decade)

다섯째,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0년 교육(DESD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여섯째, 역량강화를 위한 문해교육사업(LIFE, UNESCO Literacy Initiative for Empowerment)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UIL의 전략적 목표들은 프로그램 특화 영역으로 6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구현 전략들은 행동 영역으로 4가지가 수행되었다. 이를 조합하여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UIL 중장기 전략의 전략적 목표(2008-2013)

행동 영역	특화 영역				
	평생학습 촉진	문해 촉진	성인 교육 통합	아프리카 역량 강화	교차적 지원
옹호	평생학습 관점과 더불어 교육발달 정책 개발	국가발달과 교육계획으로 통합된 문해 정책	성인교육정책과 교육 및 발달 아젠더와의 통합	이중언어교육과 지역 언어의 증진	상대 청중에게 도달하는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
연구	비형식적, 형식적 교육 실천들 간의 시너지 효과 증진	문해정책, 프로그램과 훈련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활용	성인학습과 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의 정기적 출판	ADEA(격년제 회의)와의 연구 협력	정책입안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연구 출판 및 전파
역량 강화	평생학습 촉진과 제도화를 위한 틀과 도구 개발	교육자, 자료, 평가도구의 발전	자료수집과 분석 방법론 개발	교육과정, 훈련능력,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개선	온라인 정보원의 발전
네트워킹	좀더 알려진 실천가 네트워크	북남-남의 협력을 위한 적극적 네트워크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성인 학습자들의 포럼 독려	교육을 위한 2차 시기의 아프리카연합으로의 투입	

자료: UIL(2008). Medium-term strategy 2008-2013, p.14

이후로 전개되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의 대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6> UIL 중장기 전략의 임무와 목표(2014-2021)

구분	내용			
UIL의 임무	성인과 계속학습, 문해와 비형식적 기본교육에 초점을 두는 평생학습 분야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			
목표	UIL	연구 역량강화 네트워킹 출판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자와 실천가 공동체가 이익을 얻고, 그들의 평생교육 정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회원국들의 EFA와 이후를 위한 마지막 노력과, 유네스코의 핵심영역, 포괄적이고 성에 민감한 문해, 일과 연계된 비형식학습과 능력개발에서 고수준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국을 지원하기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학습사회를 이루기 위한 주도적인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서 평생학습 촉진하기	
유네스코 교육부문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질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발달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도록 학습자 역량 강화	미래교육 의제 형성	

자료: UIL(2014). Medium-term strategy 2014-2021, p.18

2) 영국⁴⁾

영국은 20세기 후반 약 30여 년 동안 평생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 지침을 국제적으로 보급해온 유네스코와 OECD의 평생학습 체제 수립과 구현 방향에 입각하여 교육개혁을 단행해 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신 영국’ 건설을 모토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산업대학 설립, 개인학습구조 제도의 도입, 학습기술원 설치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평생학습 정책의 계획, 내용, 규모 등은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영국은 지속적인 법 정비를 통해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정해 왔다. 1944년 교육법 제정으로 기초교육, 중등교육, 계속교육의 교육체제가 마련되었고, 1946년

4) 평생교육진흥원(2008). ‘영국 평생교육 정책동향: 영국 평생교육 정책의 전개와 동향을 중심으로’를 요약, 정리함.

성인교육규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계속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유네스코의 평생교육구상과 OECD의 순환교육 정책을 반영하였다. 그 후 1988년 교육개혁법과 1992년 계속교육과 고등교육법, 2000년 학습기술법을 통해 계속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체제를 정비하였다.

영국의 성인교육은 처음 민간단체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영국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교육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하여 영국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이 단행되면서 비직업적인 성인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직업계속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다. 그리하여 1990년대 말 이후 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개방화를 통한 계속전문교육의 심화와 더불어 지역사회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 교육으로부터 혜택 받지 못한 집단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집중시켰다.

영국 정부는 OECD가 제안하는 시장중심형 학습사회 건설에 더 큰 비중을 두었는데, 유네스코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는 학습사회 건설을 강조한다면, OECD는 인적 자원 개발에 효율적인 학습사회 건설을 모토로 하는 평생학습 정책을 중요시한다. 영국은 OECD의 ‘학습과 일터를 연계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평생고용의 가능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상정하는 시장중심형 학습사회론’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재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1988년 교육개혁법 이전 인문학 위주의 교양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즐기는 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국민에게 보다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고 학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제거하며 16세 이후의 교육과 훈련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의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영국 정부는 성인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여 16세 이후 연령층의 의무교육 이후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구인 학습기술협의회(LSC)를 신설하였다. 성인들의 기초기술 수준 제고를 위하여 문해 및 수리력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직업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산업대학, 개방대학 등을 설립하여 큰 효과를 거두었다.

산업대학(University of Industry: Ufi)은 학습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게 학습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학습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정보망으로서 개인과 기업에게 학습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에 부응한다. 이의 성인학습서비스는 ‘Learndirect’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문해, 수리, 기초 기술, IT 기술 등의 기술 관련 코스와 경영과 관련된 과목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코스로 나누어져 운영된다. 또한, 이원화된 국가자격제도의 통합 및 단일화를 통하여 직업자격구조를 고등교육자격의 구조와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16세 이후 청소년과 성인들이 누구나 생애의 어느 시점에서나 계속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촉진하였다.

영국의 평생교육정책은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고등교육을 열망하는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나아가 독립적이면서 통합된 평생교육 추진기관의 설립과 제도 등을 통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시장중심형 학습사회론을 비판하며 시민단체 같은 제3섹터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교육운동과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운영되고 있다.⁵⁾ 이러한 운동은 고등교육의 상품화, 스펙화, 엘리트화에 대한 저항으로, 최근 텐트 시민대학(Tent City University), 사회과학센터(Social Science Centre), 진정한 개방대학(Really Open University) 등 다양한 학습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정부 권력을 지역사회, 즉, 시민들에게 이양하면서 시민들의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한 사회적 학습에 중점을 두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하 영국의 최근 동향은 희망제작소(2013). ‘해의 평생교육사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평생교육을 만나다’의 영국편을 참고하였다.

3) 스웨덴⁶⁾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하는 스웨덴은 경제사회학적으로 반 사회주의형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로서, 가장 전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이다.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조세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의 고성장 시대가 끝남에 따라 재정 압박으로 인해 복지제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모든 연령과 모든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 왔지만, ‘평생교육체제’나 ‘평생학습체제’라는 개념 하에 고려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스웨덴이 추구해온 교육제도는 하나의 평생학습 모형으로 교육 시스템의 기초적인 원칙은 모든 이들이 동등한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전체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반영되어 있다. 스웨덴의 학교교육은 1세부터 6세까지를 위한 유치원과정(비의무과정), 7세에서 16세까지의 의무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공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제공된다. 고교 졸업자의 약 50%가 대학에 진학하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 성인교육의 목적은 크게 3가지인데,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과정, 지속적인 교육준비과정, 개인의 역량개발 등이다. 이러한 성인교육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교육 대상자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검증 후에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성인교육에는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위한 기초성인교육, 고등교육 희망자를 위한 성인교육, 장애 성인교육,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교육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성인들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지식 및 경험을 쌓게 되는데, 이것을 찾아내고 검증하는 것은 스웨덴 성인교육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이다. 이의 인증 및 검증과정의 첫 단계는 성인이 학교(또는 교육기관)를 방문하여 가장 적합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다. 교사와 함께 희망하는 직업군 및 내용을 탐색하고 지원자의 배경지식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하계 평생교육 복유립 테마 연구 결과보고서, 스웨덴 편을 요약, 정리함.

및 선행 경험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교사 외에도 과정마다 담당 교사들을 통해서도 지식 정도를 인증받게 되며, 이는 스웨덴에서 교육내용 중복을 막고자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 인증을 통하여 성인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희망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국가교육청의 성인교육 대상자는 20세에서 64세까지로 사회참여 및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취미활동 등은 개인부담으로 진행된다.

스웨덴의 성인교육위원회는 1951년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교육부에 소속되었다가 1991년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시민교육은 공민학교와 스터디서클이다. 이들은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자율교육의 형태이며, 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의 필요성에 따라 운영된다. 공민학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참여하는 비형식교육으로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이 있는데, 장기과정의 경우 고교를 대체하여 대학으로 갈 수 있다. 공민학교는 대부분 기숙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전달 뿐 아니라 사회성 및 협동성을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공민학교 교육비의 90%가 국가에서 지원되며, 따라서 성인교육위원회는 이 기관들의 자격을 평가 검증한다.

스터디서클은 스웨덴 사람이면 누구든지 한번씩 겪어가는 교육활동으로, 1년에 약 29,000개의 스터디서클이 결성된다. 이는 최소 3명만 모이면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균적으로 약 30시간 정도 진행된다. 스터디서클의 교육비용은 무료는 아니며 참가자가 소정의 액수를 내게 되지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큰 액수는 아니다. 스터디서클은 교육시간, 장소, 구성원 및 교육내용이 자유스러운 것이 특징으로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으며, 음악, 언어, 각종 다양한 유형의 코스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의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다. 스터디서클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주의 정신을 키우고 시민 결속 및 사회통합을 이룬다. 민주주의 정신을 양성하는 것은 정당과 관계없이 일차되는 이념 가치이다.

향후 과제로는 성인교육위원회가 국가보조금을 공정히 분배하는지, 기금이 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 평가하는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데 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 실업, 학력의

편차심화, 학업중단청소년 문제, 극우세력 사회통합 저해 등에 직면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4) 미국⁷⁾

미국의 평생학습은 성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인교육은 경제적 맥락에서 또는 개인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조장하지만, 대개의 성인교육정책은 주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고 실행된다. 연방전부는 법령에 의거 주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지방의 기관 및 단체들과 더불어 평생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성인들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기업체나 기업의 산하기관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성인교육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학력취득과 직업능력교육을 강조해 왔다. 미국 성인들은 다양한 형식 및 무형식 교육기회에 접촉하는데, 무형식교육 활동은 교육적 인증을 받지 못하지만 직업 및 개인의 관심에 따라 주제가 광범위 하면서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무형식교육은 정부기관, 지역사회기관, 기업, 종교기관, 사회단체, 학술단체, 전통적 교육기관 등에 의해서 제공된다. 교육 결과를 인증하는 중등후기 형식교육의 기회는 모든 연령의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성인교육의 유형은 크게 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 개인의 성장과 발전 등의 범주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문해교육은 직업능력투자법/성인교육 및 가족문해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며 이에 대한 기금은 연방정부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해교육은 중등학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 미국민으로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는 16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성인기초교육, 성인중등교육, 영어문해교육 등이 있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도제훈련, 직업능력개발, 자격인증 등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각 기관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서로 협조 하에 공동으로 성인학습자에게

7) 평생교육진흥원(2008). '북미 평생교육 정책 동향' 중 미국편을 요약, 정리함.

제공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자격증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사내대학, 고등교육기관,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커뮤니티칼리지(Community College)들은 이 교육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건강 및 오락, 취미, 시민권리 및 정치적 관심, 여행 및 문화적 경험, 종교 및 성경연구 등 관심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모든 연령 및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특히 노인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은퇴자학습원(Institute for Learning in Retirement)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지역노인의 요구와 대학의 목적을 반영하여 만든 기구인데, 약 30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세대간교육프로그램도 인기인데, 튜터프로그램, 상호보호프로그램, 자서전프로그램, 공동합창, 협동적 예술활동 등이 성향을 이루고 있다. 이외 엘더호스텔(Elderhostel) 프로그램은 학습의 기회를 가지면서 동시에 여행을 하는 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보스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조직으로 세계 1900여개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년 10,0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행을 병행하며 대학캠퍼스에서 학습과 워크숍을 하는 노인평생교육으로, 문화와 생태계 학습 프로그램, 고대역사와 예술 등의 정규 프로그램, 북미탐구 프로그램, 야외활동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선상탐구 프로그램, 세대간 학습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대학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저녁프로그램, 확장프로그램, 비학점코스, 방송코스, 원격학습코스 등이 있다. 특히 커뮤니티칼리지는 이 분야에서 능동적이다. 둘째, 외국인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와 같이, 문맹을 줄이기 위한 기관들도 성인교육을 위한 수단이다. 셋째, 기업체, 노동단체, 사설기관들도 직업교육, 고교학력취득에 상응한 교육, 부모교육, 문해교육을 포함한 성인기초교육, 신체 및 정서발달교육, 예술 및 문화, 응용과학, 오락, 전통적 학력취득과목, 비즈니스, 전문적 기술과목 등의 성인교육을 지원한다.

5) 일본⁸⁾

일본에서의 평생교육은 사회교육, 생애학습, 생애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광역자치체인 도도부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체인 시정촌에도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평생교육관련 업무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⁹⁾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조직은 문부과학성의 생애학습정책국이다. 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보급, 계발, 정보제공, 다양한 학습기회 정비, 학습결과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1949년에 이미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사회교육의 장려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국민의 교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도도부현과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였다. 이 사회교육법에서는 공민관에 관한 조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후 일본의 사회교육은 공민관과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 설치와 강좌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1990년 생애학습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의 교육기능을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생애학습진흥법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의 평생학습을 포함한 도도부현을 기반으로 문부성과 함께 당시의 통산성을 관할기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사회교육법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에 의한 공적 사회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교육법과 민간교육산업을 포함한 생애학습진흥법 이후에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이 제정되었다.¹⁰⁾ NPO는 직접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단체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NPO가 과제로 하고 있는 사회과제, 지역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비영리분야가 공익적인 평생교육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 평생학습의 주요 특징은 지역주민의 자치와 학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8) 평생교육진흥원(2008)의 '일본 평생교육 정책 동향: 일본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동향과 그 과제' 중 중앙정부의 평생교육추진체제 및 동향과 희망제작소(2013)의 '해외 평생교육사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평생교육을 만나다'의 일본편을 요약, 정리함.

9) 근래에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일반행정으로 이관하고 있는 자치제도 생기고 있다.

10)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전국에서 지진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모여들었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민간에 의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PO법이 만들어졌다.

다는 점이다. 전후 교육개혁의 지방분권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교육 및 행정이 지역중심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며 전개되어 왔다. 주민자치 원칙은 통제적인 사회교육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게 통제나 지배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시설마다 운영심의회나 이용자 연합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행정과 시설 사업에 주민의 자치와 참여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실제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다양하게 전개, 축적되어 온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사회교육의 공적 체제의 재검토, 시장원리의 도입, 규제완화, 시설의 민간위탁(지정관리자 제도) 등의 시책이 도입되고 사회교육법과 공민관 설치 기준 등의 개정이 이어졌다. 신보수주의 노선에 따라 2006년 12월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6월에 사회교육법도 개정되어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조하게 되었다. 대규모의 시정촌 합병, 지방재정의 긴축, 자치단체장 직속행정으로 사회교육시설 흡수 및 통합 등 이러한 동향 속에서 사회교육 행정 및 시설을 축소, 개편, 폐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른 한편으로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에 대한 역할을 사회교육에 기대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행정주도의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를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과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연계하고 서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민협동' 지역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시민역량형성을 사회교육 현장에서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집중과는 반대로 지방의 경우 인구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가 강조되는데, 여기서 마을살리기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교육이 요구되었다. 마을만들기가 인재양성과 사람만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교육으로 음악제나 영화제, 인형극 등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의 개발위주와 공동체 붕괴로 극도로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해진 일본의 평생교육 현장에도 개인적 학습의 중요성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강조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주의 삶과 학습의 한계를 깨닫고 공공성과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왔던 사회교육적 요소가 사회에 필수적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학습과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려는 사회교육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2.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 사례

인천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하여 타시도 중 서울과 경기도는 최근에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5개년으로 수립된 이 진흥계획은 그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서울과 경기도의 평생교육 정책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시도의 평생교육 정책 사례를 서울과 경기도의 최근의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의 경우는 올해로 종료되는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는 2017년까지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아직 그 다음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에 최근의 것을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2010~2014)¹¹⁾

(1) 수립 배경

서울시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평생학습 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하였다. 궁극적으로 서울을 세계 10대 평생학습도시로 진입시키기 위한 추진 동력으로서 평생교육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2) 평생교육 환경 분석

서울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전략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11) 서울특별시(20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을 요약, 정리함.

<표 2-7> 서울시 평생교육 환경 SWOT 분석

<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집단 활동 참여 증가 예상 · 고령화에 따른 노인세대 증가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 외국인 인구 유입 급증 · 주 일제로 인한 여가 시간 확대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중심지로서 대한민국 경제 선두 ·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 유입 	<p>S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된 여가 및 사회 참여 욕구를 경제성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으로 연결토록 지원 · 서울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을 활용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산업, 기술이외 인문,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부문의 평생교육을 통한 직·간접적 지원 필요 	<p>W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특성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차원의 대응 ·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시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체제 확립 ·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와 통합된 서울시 평생학습 체제 구축
<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지체 · 전국 및 수도권 대비 높은 실업률 및 자영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 주력사업인 서비스업 및 미래 성장산업군의 고용창출효과 미비 · 이혼율 증가 등 가족 가치의 해체 및 단독가구 증가에 따른 개인중심의 생활 경향 확산 	<p>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교육수준 유지 · 서울의 높은 실업률 등의 해결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 확립 · 가족가치 해체와 개인중심 생활 경향을 고려한 평생학습 요구 분석과 대응 	<p>W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인구의 경제적 필요로움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접근 · 사회통합과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확립 및 지원 · 서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평생학습 · 서울의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 확립
	<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 보유 ·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의 교육수준 	<p>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성별 소득수준 등 지역내 복잡, 다양한 인구 특성으로 인해 평생교육 요구 다양 · 저소득층, 외국이민자등 교육소외계층 증가 추세 · 노인인구, 특히 여성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 및 노년기 빈곤

자료: 서울특별시(20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p.3

이러한 환경분석을 통하여 첫째, 우수한 교육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 둘째, 고령화, 외국인 증가 등 인구 특성 및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셋째, 서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하며, 넷째,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비전 및 전략체계

서울시는 세계 10대 평생학습도시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형 평생학습도시로서 2009년 당시 29.2%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2015년에는 OECD 평균(35.6%) 이상 40%의 평생교육 참여율로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모든 시민을 위한 학습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친화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4)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서울시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5개년 동안 실행할 추진과제로 3대 중점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9개의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21개 세부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8> 서울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의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중점 영역 (3대 영역)	추진 과제 (9개 과제)	세부 사업 (21개 사업)	
I. 학습공동체 인프라 구축	1. (가칭) 서울시민평생학습원 건립 및 운영	1. 서울시민평생학습원 건립 추진	
		2. 시민대학 운영 확대 개편	
		3. '서울평생학습지도' 등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4.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5. 학습상담콜센터 운영	
	2. 서울형 평생교육대학 육성	6. 대학과 지역간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7. 서울형 대학 평생교육원 지정 및 운영	
	3. 지역생활권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8. 시민제안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II.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4. 학습-고용 연계의 서울형 순환교육 실현	10. 사회초년생 스타트 프로그램
11. 워킹맘 보육 직업훈련 연계프로그램			
12. 직업 진로교육프로그램 지원			
5. 교육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13. 신소외계층 국내적응 프로그램 지원	
		14. 소외계층 기초역량 및 직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지원	
6. 평생학습 문화 조성		15. 서울평생학습시민상 제정	
		16. 학습공원 조성 사업	
III. 네트워크 구축		7. 학습성과 분석 및 인증체제 구축	17. 평생교육 평가 및 성과관리 사업
			18. 서울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인증 사업
	8. 네트워크 체계 구축	19.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체계 구축	
		20. 수도권 평생학습 광역네트워크 구축사업	
	9. 글로벌 도시간 협력 강화	21. 글로벌 도시간 교류 협력 사업	

자료: 서울특별시(20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p.7

2) 경기도의 평생교육중장기 진흥계획(2013~2017)¹²⁾

(1) 수립 배경

경기도는 초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평생교육의 전략적 추

1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3). '경기도 평생교육중장기진흥계획'을 요약, 정리함.

진이 필요해진 시대에 경기도에서도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더불어 잘사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일-학습복지-문화의 연계로 주민주도의 마을학습 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 평생교육 환경 분석

경기도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하여 중장기 진흥계획의 중점 방향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립하였다. 첫째, 초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서 평생교육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일-학습복지-문화 연계의 주민주도 마을학습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 실·국, 시·군 등 분산된 평생교육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3) 비전 및 전략체계

경기도 평생교육의 비전으로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경기도민’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으로 평생학습의 생활화,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 평생학습 추진 기반 강화를 수립하였다.

<표 2-9> 경기도 평생교육 환경 SWOT 분석

<p>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로 평생학습 채택 · 다양한 유형의 도시 공존 ·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 증가 ·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콘텐츠 채널 다양화 · 평생교육의 국제적 관심 증대 	<p>S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도정책의 전략적 시행 · 고령화사회대비한경제활동인구 증대 · 경기도 변화를 예견하는 선제적 평생학습정책 마련 · 경기도 평생학습의 국가적 선도 역할강화 · 창의인성교육 보급·확대 	<p>W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보급채널 다각화 · 평생학습 정보 생성·유통의 효율화 · 담당 인력의 전문성 및 관계자 인식 강화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선도
<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법 개정 시행 · 도 재정 감소에 따른 평생학습 및 복지 지원 감소 우려 · 정권에 따른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의 유동성 상존 · 도민의 개인화 성향 가속 	<p>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추진주체의 무게중심 이동 · 평생학습문화 형성 기반 마련 · 평생학습과 공동체가치의 연계 	<p>W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의 협력·공조체제 강화 · 평생학습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학교교육 연계 평생학습 추진 · 도민의 학습권 추구를 위한 평생학습 격차 해소
	<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 풍부한 시설 및 인프라 · 평생학습도시 최다 보유 · 최대 규모 전담 조직(진흥원) ·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국단위 전담조직(평생교육국) · 지자체의 풍부한 사업 성공 경험 · 전국 최대 창의인성 콘텐츠 보유 	<p>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편적 네트워크에 따른 정책 연계 미흡 · 교육청과의 연계 부족 · 도 내 관계자 평생학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 지역 및 계층 간 평생교육 격차 발생(인프라, 인력 등) · 평생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 넓은 면적에 따른 예산 효율성 취약 · 평생교육은 무료교육이라는 인식

자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3). 경기도 평생교육증장기진흥계획, p.109

(4)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경기도는 3대 목표와 추진전략, 10개 전략과제 및 2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10> 경기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추진 전략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I. 평생학습의 생활화 (11개)	1. 평생학습의 전략화	1-1. 평생학습정책의 시·군정 전략과제화
		1-2.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전략적 기능 강화
	2. 평생학습의 일상화	2-1. 평범한 마을주민의 학습재능기부 일상화
		2-2. 생활 속의 창의인성학습 지원체제 구축
	3. 평생현역을 위한 학습촉진	3-1. 4050, 6070세대의 생산적 사회참여 지원
		3-2.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3-3. 중소기업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4. 道 전역 평생학습 캠퍼스화	4-1. 스마트 경기평생학습 구현
		4-2. 평생학습 방송채널 확보
		4-3. 경기도 행복학습 콜센터 운영
		4-4. 道내 각종 시설의 평생학습 거점공간화
II. 건강한 학습생태계 조성 (6개)	5. 작은 공동체 평생학습촉진	5-1. 경기도민 학습가족(Learning Family) 확산
		5-2.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제도 혁신
	6.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실현	6-1. ‘일-학습복지-문화’가 연계되는 학습마을 (Learning Village) 확대
		6-2. 평생학습 소외지역의 학습지원
	7. 사회융화형 평생학습 지원	7-1.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위한 소외계층 학습기회 확대
		7-2. 도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III. 평생학습 추진기반강화 (8개)	8. 평생학습 네트워크 확장	8-1.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 구축
		8-2.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9. 평생학습 품질향상	9-1.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구축
		9-2. 평생학습 종사자 전문성 강화
		9-3. 경기도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
	10. 학교의 평생학습 자원화	10-1. 교육청의 전략 파트너화
10-2. 학교(초·중·고)의 평생학습 거점화		
10-3. 대학의 학과 특성을 활용한 평생학습 지원		

자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3). 경기도 평생교육중장기진흥계획, p.114

3. 외국과 타시도 사례의 시사점

1)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기반 구축

평생교육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는 것과 그를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부분 중앙정부가 법적 근거를 구비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지자체는 직접적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 대개의 평생학습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법적 근거와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¹³⁾ 법적 근거를 가진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많아졌지만, 민간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역할 또한 정부가 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생학습이 법적 근거와 공적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지원을 받게 되어 보다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도 법적 근거와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먼저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2) 평생학습 경험인증 시스템을 통한 학습 중복 방지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평생학습의 경험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규교육과정이나 직업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학습계좌제와 독학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평생학습 경험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험학습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험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스웨덴의 경우 엄중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경험 학습과 인증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험학습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교육내용의 중복을 막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 일본의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민자치를 존중하는 학습공동체

성인들의 평생학습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나 민간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주민자치로 평생학습이 일찍이 시작되어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학습을 기획하고 결정하고 주도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 정부는 단지 이에 필요한 자원과 공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웨덴의 스터디서클도 이와 유사한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한다. 최근 경기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하면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단위 학습공동체에 중점을 두는 중장기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학습공동체가 성인 평생교육의 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습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주민주도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4) 직업능력개발 중심에서 학습복지로의 전환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생교육은 성인 중심으로 기초적인 문해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어 왔다. 복지정책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학습과 고용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문해교육과 직업재교육, 훈련에 초점을 둔 평생학습이 많은 지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영국은 이러한 특징을 강하게 드러낸 평생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층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과 고용의 연계도 필요하지만, 노인으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의미의 평생학습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을 다양하게 실행하는 미국은 일과 학습의 연계뿐 아니라 일과 학습과 문화가 함께 연계되는 평생학습을 실행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중장기 계획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학습복지 개념의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Incheon

제3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환경

제1절 인천광역시 일반 환경

제2절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추진체제 및 인프라

제3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환경

제1절 인천광역시 일반 환경

1. 인구학적 특성과 평생교육

1) 인천광역시의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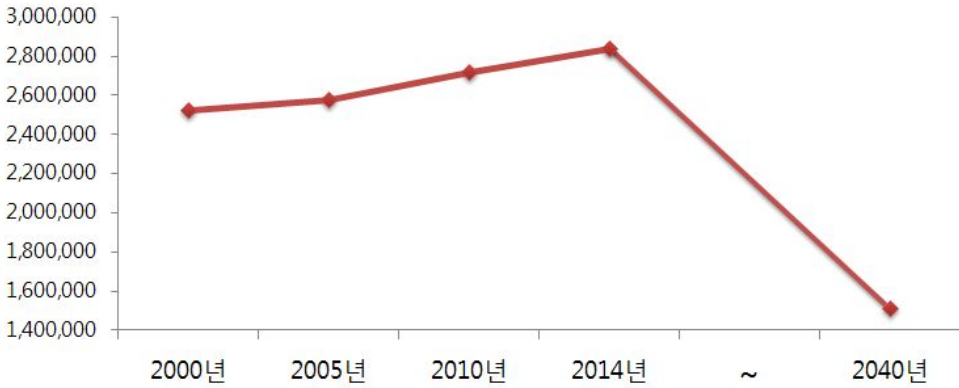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014년 현재 약 290만 명으로 지난 2000년도 250만 명에 비해 약 4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났다. 이처럼 총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0세~19세, 20세~39세 연령의 인구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인구도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전반적인 사회현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40년의 인천시 추계인구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전체인구는 151만 명으로 1/2 정도 줄어들고, 연령대별 인구 격차는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천시에 필요한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들은 고령화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층에 비중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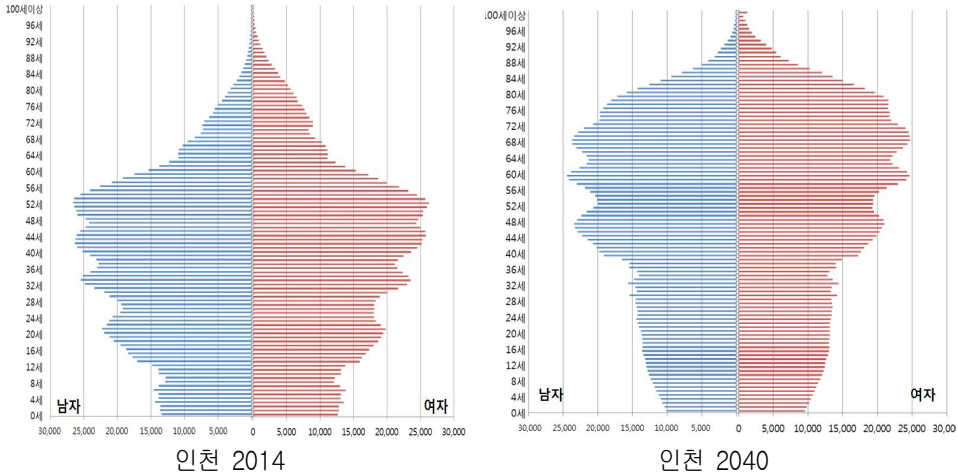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0세~19세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2000년	789,745	31.3	934,294	37.0	587,030	23.3	211,393	8.4
2005년	700,539	27.2	881,126	34.2	734,625	28.5	262,066	10.2
2010년	649,108	23.9	857,159	31.6	868,740	32.0	338,980	12.5
2014년	603,625	21.3	851,348	30.0	968,385	34.1	415,913	14.6
2040년	246,954	16.4	298,302	19.8	436,818	29.0	525,200	34.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0-14년도 추계인구 참고.



<그림 3-1> 2000년-2040년 인천광역시 인구 변화 추이



<그림 3-2> 인천시 2014년도와 2040년의 인구변화 모형

고령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가 울산, 인천, 경기 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경기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3, p.1),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노년층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2014년도 인천시 군구별 인구를 살펴보면 부평구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남동구, 서구, 남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0~19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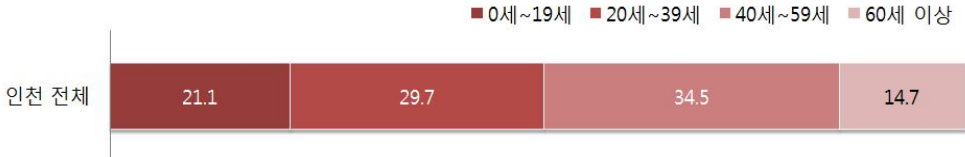
데, 서구는 0~19세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39세 인구는 전체적으로 27~3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계양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0~59세인 장년층의 경우도 계양구가 36.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는 강화군, 옹진군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인천시 내 군 단위 지역은 군청의 평생교육담당 부서의 부재 및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 3-2> 인천시 군구별 인구 현황(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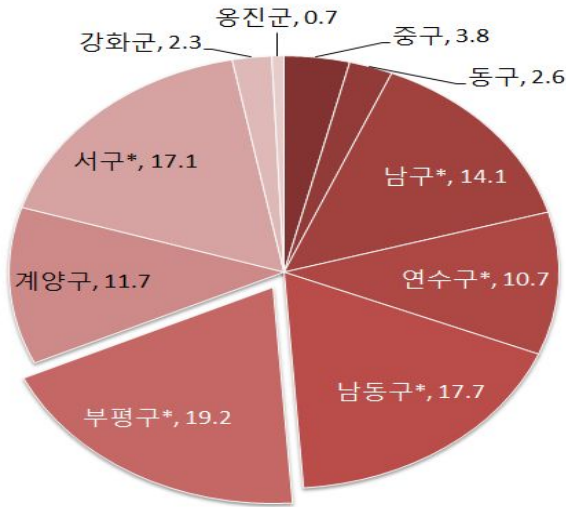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0세~19세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총계	인구 분포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천 전체	611,911	21.1	860,203	29.7	1,001,410	34.5	425,547	14.7	2,899,071	100
중구	22,553	20.3	31,130	28	37,016	33.3	20,613	18.5	111,312	3.8
동구	13,625	18.4	20,057	27	24,079	32.4	16,468	22.2	74,229	2.6
남구*	74,701	18.3	121,801	29.8	137,680	33.6	75,098	18.3	409,280	14.1
연수구*	73,055	23.6	90,144	29.1	111,013	35.9	35,070	11.3	309,282	10.7
남동구*	111,402	21.7	155,427	30.3	175,687	34.3	70,193	13.7	512,709	17.7
부평구*	112,198	20.1	170,210	30.5	192,986	34.6	82,047	14.7	557,441	19.2
계양구	72,662	21.3	104,380	30.7	123,286	36.2	40,195	11.8	340,523	11.7
서구*	119,610	24.1	149,782	30.2	170,776	34.4	56,424	11.4	496,592	17.1
강화군	9,443	14.1	12,024	17.9	21,782	32.5	23,785	35.5	67,034	2.3
옹진군	2,662	12.9	5,248	25.4	7,105	34.4	5,654	27.4	20,669	0.7

자료: 인천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2014. 10월 기준



<그림 3-3> 인천시 연령별 인구 분포 비율 현황(2014)



<그림 3-4> 인천시 군구별 인구 분포율(2014)

2) 노인인구(65세 이상 인구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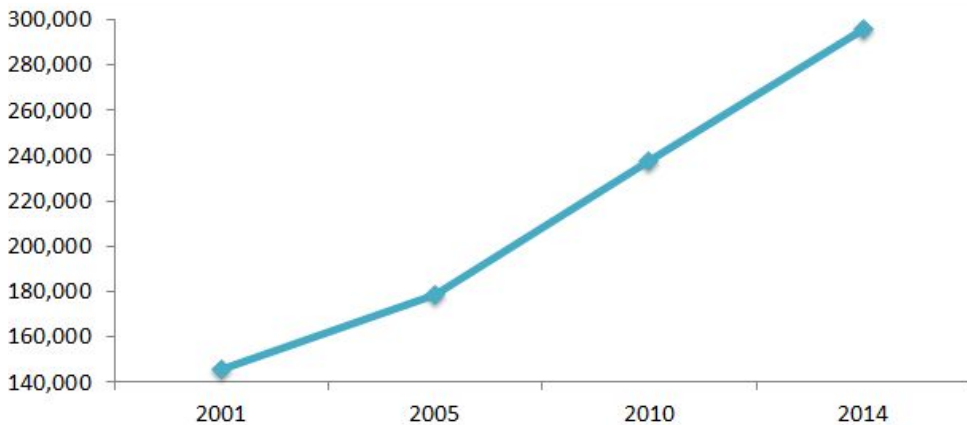
인천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2001년 5.7%에서 2014년 10.2%로 13년간 4.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천시 각 군구별 노인인구 비율은 강화군, 옹진군 등 군 단위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지만 군 단위를 제외한 구 단위 중에서는 동구, 중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이 비교적 노인인구 분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노인층 인구증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인천시의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3> 인천시 군구별 노인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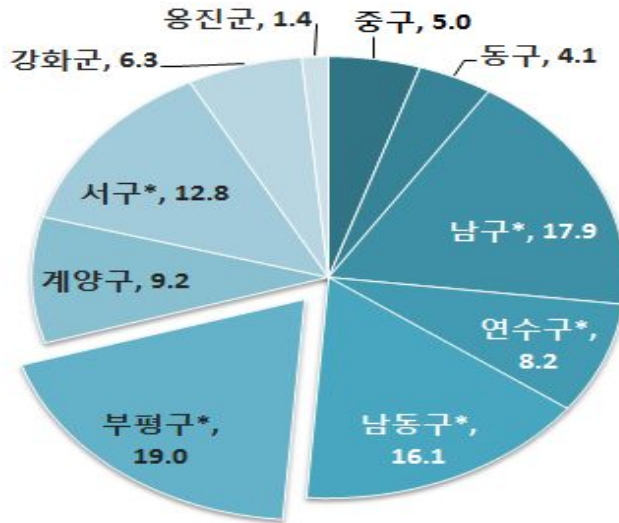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01		2005		2010		2014		분포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천시	145,626	5.7	178,602	6.9	237,805	8.5	295,832	10.2	100
중구	6,854	9.3	8,862	9.6	11,045	11.4	14,756	13.3	5.0
동구	6,901	9.1	8,207	10.5	10,390	12.9	12,058	16.2	4.1
남구*	27,353	6.4	33,369	7.9	44,287	10.3	52,917	12.9	17.9
연수구*	12,389	4.7	15,116	5.7	19,307	6.8	24,193	7.8	8.2
남동구*	20,168	4.9	23,674	6.2	36,405	7.5	47,506	9.3	16.1
부평구*	28,123	5.1	36,053	6.4	46,859	8.1	56,209	10.1	19.0
계양구	14,227	4.2	16,949	5.1	22,563	6.4	27,334	8.0	9.2
서구*	15,818	4.5	20,386	5.4	27,319	6.5	37,955	7.6	12.8
강화군	11,098	16.6	12,982	19.9	16,010	23.7	18,636	27.8	6.3
옹진군	2,695	19.2	3,004	19.2	3,620	19.2	4,268	20.6	1.4

자료: 인천통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64세 이상 인구 수 참고.



<그림 3-5> 2001-2014년도 인천시 노인인구 변화



<그림 3-6> 인천시 자치구별 노인인구 분포율(2014)

3) 여성인구 현황

현재 인천시의 여성인구는 140만 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 중 49% 정도에 해당 하며, 인천시의 연령대별 여성인구를 살펴보면 현재 40~59세의 여성인구 비율이 전체 여성인구의 3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여성인구를 살펴보면, 0~19세의 유소년기 연령대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가 비율이 높은 편이고, 20~39세 청년층은 계양구, 서구, 부평구 순서로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0~59세 장년층은 계양구가 36.1%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수구, 부평구가 뒤이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60세 이상은 군 단위 지역인 강화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 단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동구가 가장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천시 여성인구를 군구별로 나누어서 보면 인천시 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가 여성인구도 19.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뒤이어 남동구와 서구 순으로 많다. 여성인구가 가장 적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옹진군, 강화군이며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중에서는 동구, 중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여성인구 분포가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인구 현황을 보았을 때, 인천시는 현재 40~59세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군구별로 여성인구의 분포와 연령대별 분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욕구에 기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 인천시 연령별 여성인구 현황(2014)

(단위: 명, %)

구분	0세~19세		20세~39세		40세~59세		60세 이상		총계	분포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천전체	295,762	20.5	416,172	28.9	493,788	34.3	235,880	16.4	1,441,602	100
중구	10,856	20.2	14,640	27.3	16,937	31.5	11,270	21.0	53,703	3.7
동구	6,550	17.8	9,407	25.6	11,517	31.3	9,311	25.3	36,785	2.6
남구*	36,063	17.8	56,854	28.1	68,010	33.6	41,524	20.5	202,451	14.0
연수구*	35,264	22.8	44,472	28.7	55,528	35.9	19,569	12.6	154,833	10.7
남동구*	53,976	21.0	75,945	29.6	87,837	34.2	39,006	15.2	256,764	17.8
부평구*	54,226	19.4	83,119	29.8	96,342	34.5	45,636	16.3	279,323	19.4
계양구	35,016	20.6	51,167	30.1	61,352	36.1	22,260	13.1	169,795	11.8
서구*	58,014	23.6	73,421	29.9	82,925	33.8	31,105	12.7	245,465	17.0
강화군	4,538	13.6	5,347	16.0	10,427	31.2	13,095	39.2	33,407	2.3
옹진군	1,259	13.9	1,800	19.8	2,913	32.1	3,104	34.2	9,076	0.6

자료: 인천광역시청, 인천통계, 2014.10월 기준 인구통계 수 중 여성인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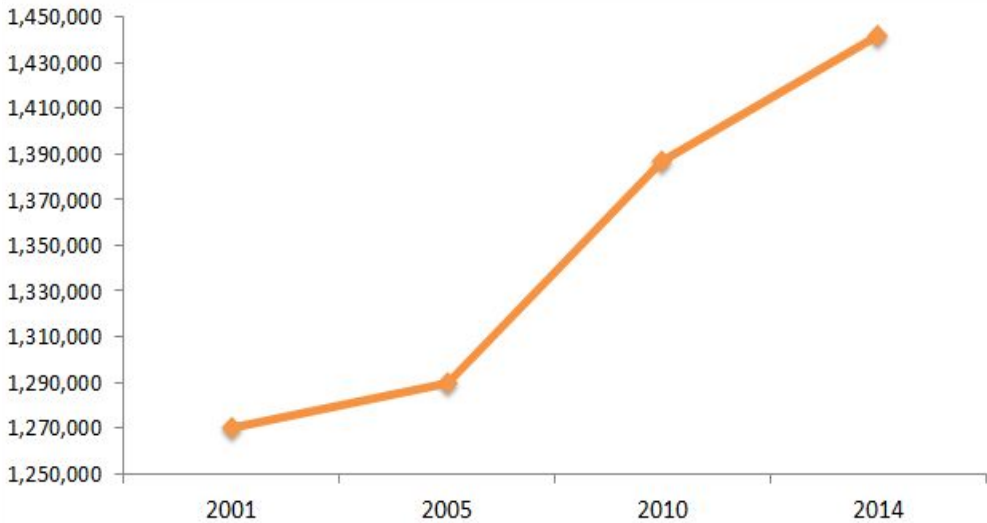
2001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인천시 여성인구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인구 증가 폭과 비슷하게 높아지거나 조금씩 증가한 반면에 동구와 남구의 경우에 2001년에 비해 현재 여성인구수가 소폭 감소하였고, 서구의 경우는 여성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인천시 군구별 여성인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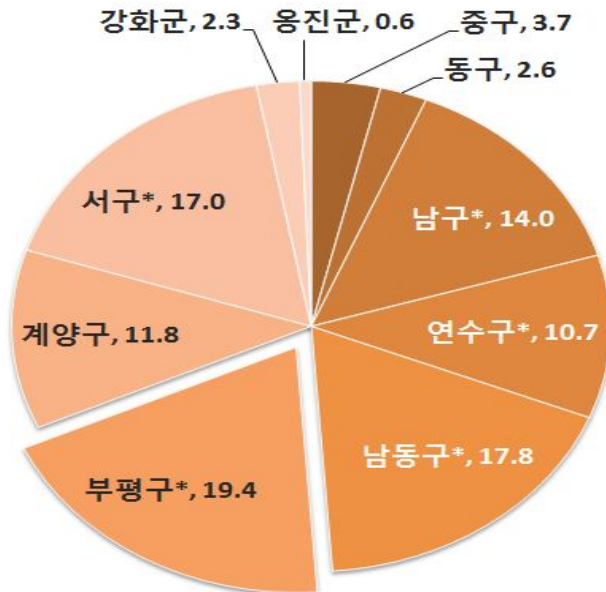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01	2005	2010	2014
인천전체	1,270,198	1,289,736	1,386,849	1,441,602
중구	36,287	44,853	46,444	53,703
동구	37,410	38,737	39,901	36,785
남구*	210,646	207,872	212,902	202,451
연수구*	130,207	132,529	140,674	154,833
남동구*	201,843	188,545	239,891	256,764
부평구*	273,765	282,819	286,642	279,323
계양구	168,495	166,748	174,835	169,795
서구*	171,119	187,290	203,010	245,465
강화군	33,545	32,813	33,875	33,407
옹진군	6,881	7,530	8,675	9,076

자료: 인천광역시, 2001-2014년도 인천통계, 인구통계 참고.



<그림 3-7> 2001-2014년도 인천시 여성인구 변화



<그림 3-8> 인천시 군구별 여성인구 분포율 현황(2014)

4) 다문화인구 현황

인천시 내 거주 중인 다문화 인구수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1.1%의 다문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별로 다문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남동구, 서구인 반면에, 다문화인구 분포율이 높은 지역은 남동구, 서구, 부평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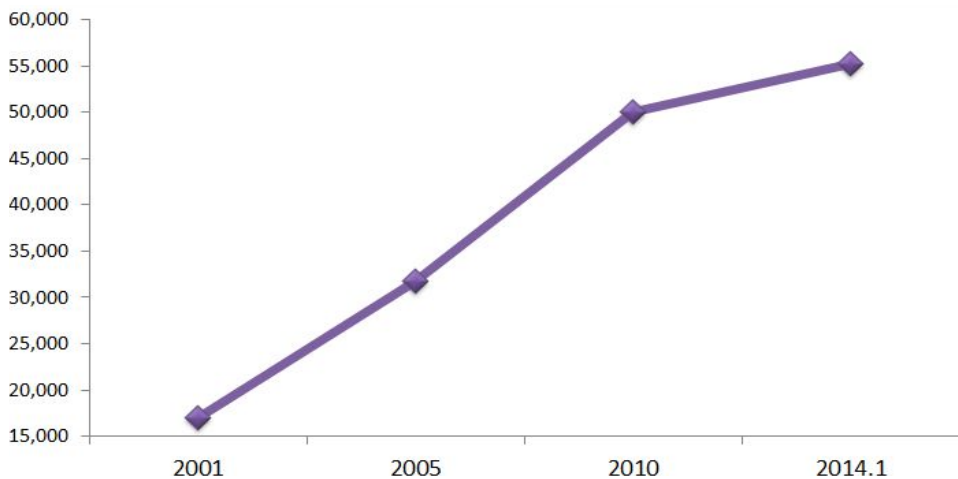
이러한 다문화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전반적으로 다문화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문화 인구를 위한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들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을 위한 외국어교육 및 외국문화체험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증설하고, 인천에 정착한 다문화 인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표 3-6>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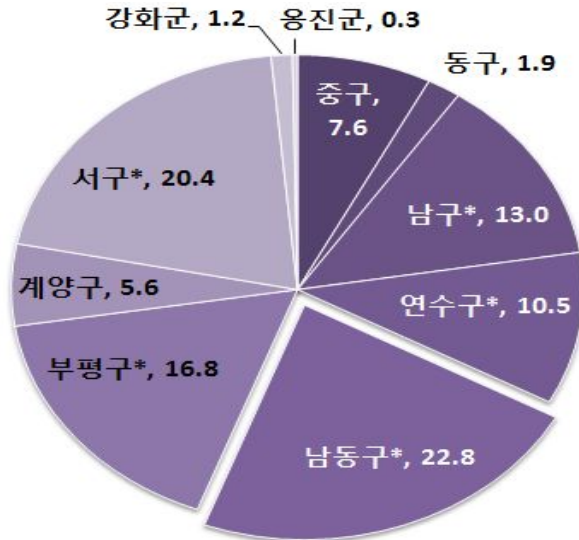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01		2005		2010		2014.10		분포율
	실제 인구	전체 인구대비 비율	실제 인구	전체 인구대비 비율	실제 인구	전체 인구대비 비율	실제 인구	전체 인구대비 비율	
인천시	16,959	0.7	31,683	1.2	49,992	1.8	55,144	1.9	100
중구	1,641	2.2	2,780	3.0	3,996	4.1	4,188	3.6	7.6
동구	435	0.6	730	0.9	1,123	1.4	1,043	1.4	1.9
남구*	1,968	0.5	3,790	0.9	6,658	1.5	7,151	1.7	13.0
연수구*	813	0.3	1,381	0.5	3,659	1.3	5,784	1.8	10.5
남동구*	5,727	1.4	9,286	2.4	12,171	2.5	12,546	2.4	22.8
부평구*	1,868	0.3	4,145	0.7	7,759	1.3	9,273	1.6	16.8
계양구	1,134	0.3	1,997	0.6	3,216	0.9	3,104	0.9	5.6
서구*	3,148	0.9	7,231	1.9	10,733	2.6	11,238	2.2	20.4
강화군	207	0.3	236	0.4	564	0.8	657	1.0	1.2
옹진군	18	0.3	107	0.7	113	0.6	160	0.8	0.3

자료: 인천광역시청, 2001-2014년도 인천통계, 인구통계 참고.



<그림 3-9> 2001-2014년 인천시 다문화인구 변화



<그림 3-10> 인천시 군구별 다문화인구 분포율(2014)

5) 장애인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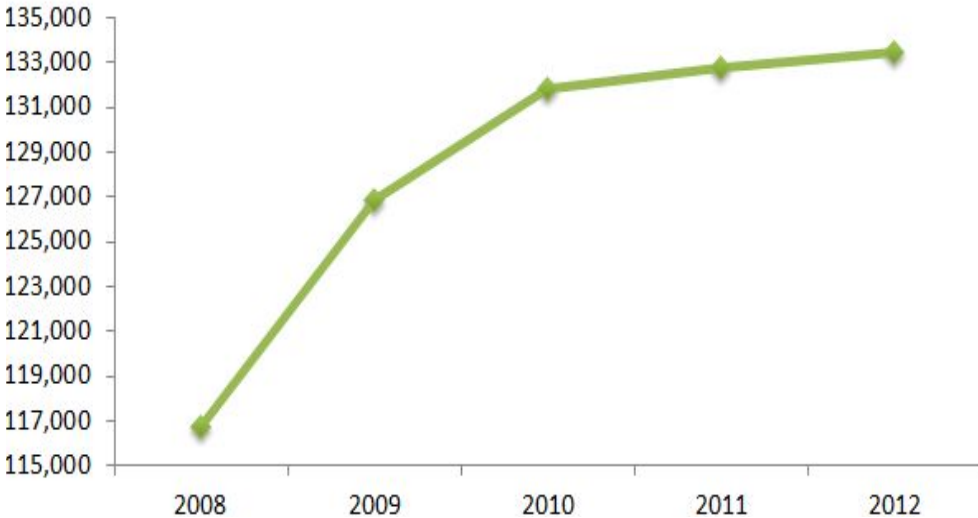
인천시 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인구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인천시 전체적으로 약 2만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 인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군구별 현황을 보면, 2012년을 기점으로 동구, 남구, 부평구에서는 소폭 감소 추세이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이며, 뒤이어 남동구, 남구 순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이미 많은 평생교육 인프라들이 형성되어 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구를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천시에 늘고 있는 장애인인구를 특별한 대상,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장애를 가진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조성하여 이를 통해 이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평생교육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표 3-7>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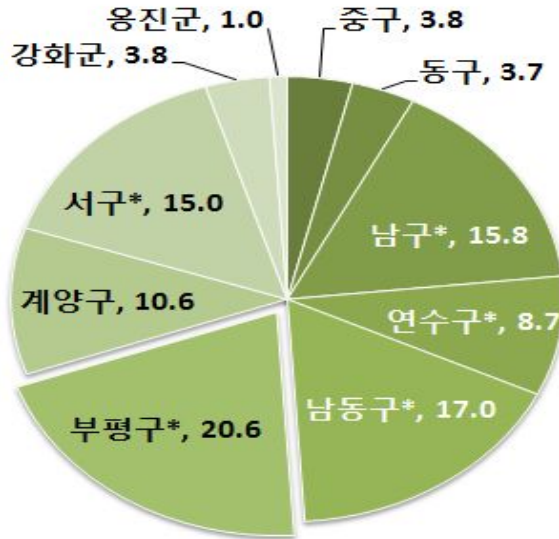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8	2010	2012	2014	분포율
인천전체	116,697	131,815	133,467	133,638	100
중구	4,421	4,979	5,099	5,380	4.0
동구	4,298	4,984	4,951	4,826	3.6
남구*	18,447	21,524	21,097	20,729	15.5
연수구*	10,239	11,480	11,567	11,697	8.8
남동구*	19,463	21,738	22,680	22,725	17.0
부평구*	25,095	27,941	27,447	27,022	20.2
계양구	12,820	14,342	14,174	14,245	10.7
서구*	16,556	18,502	20,047	20,481	15.3
강화군	4,323	5,017	5,032	5,110	3.8
옹진군	1,035	1,308	1,373	1,423	1.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8-2012년도 시군구별 등록 장애인수 참고.



<그림 3-11> 2008-2012년도 인천시 장애인인구 수 변화



<그림 3-12> 인천시 군구별 장애인 인구 분포율(2014)

6) 평생교육참여율

인천시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8.2%로 OECD평균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교하여 약 12% 가량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평균 참여율인 35.6%보다도 7.4%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천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참여율 자체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조사를 통한 통계이므로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가 국제적 평균과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OECD와 우리나라 및 인천시의 평생교육참여율 비교

(단위: %)

구분	OECD	우리나라	인천시
2013	40.4	35.6	28.2
2010	40.8	28.0	24.3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평생교육통계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시행계획 내부자료 참고.

2. 산업구조 특성과 평생교육

1) 직업구조 현황

인천시의 산업구조 현황을 전문가/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부를 제외하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1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가 12.4%, 전문가/관리직 종사자가 약 12%이며, 학생이 12.1%이다. 그런데 무직이 11.1%로 나타나 무직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천시 인구의 10명중 1명 이상이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인천시 현황을 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를 위한 직업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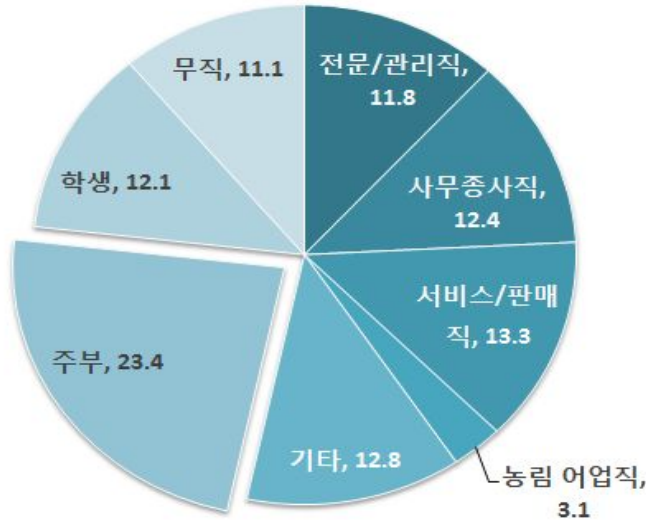
전문가/관리직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16.8%인 연수구이며 가장 낮은 지역인 동구의 8.8%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무종사직에는 동구가 1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판매직종에 종사하는 인구는 중구가 21.6%로 가장 높다. 농림·어업직 같은 경우는 군 단위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중구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3-9> 인천시 직업구조 현황(2014)

(단위: %)

구분	전문가/ 관리직	사무 종사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기타	주부	학생	무직	계
인천 전체	11.8	12.4	13.3	3.1	12.8	23.4	12.1	11.1	100
중구	12	10.1	21.6	0.3	10.3	20.3	6.4	19	100
동구	8.8	18.2	15.8	0	11.7	19.6	11.2	14.7	100
남구*	10.6	11.9	15.4	0.1	14.8	23.8	14.5	8.9	100
연수구*	16.8	13.5	11.6	0.1	8.7	20.7	15.6	13	100
남동구*	12.6	14.1	11.8	0.2	12.1	24.9	13.8	10.5	100
부평구*	11.9	9.7	15.5	0.2	13.3	25.1	14.8	9.5	100
계양구	12.7	14.5	12.5	0.5	15.9	22.5	9.9	11.5	100
서구*	12.6	14.1	10.2	0.3	12.2	28.1	13.4	9.1	100

자료: 인천통계(2014),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자료참고.



<그림 3-13> 인천시 산업구조 현황(2014)

2) 월평균소득 현황

인천시 전체의 월평균 소득 부분을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에 해당하는 인구가 37.2%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0~5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30.3%, 200~3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21.1%이다.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8%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인천시 군구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중구, 계양구이며, 중구는 무려 인구의 47.8%가 2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 7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자는 연수구가 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소득계층에 따라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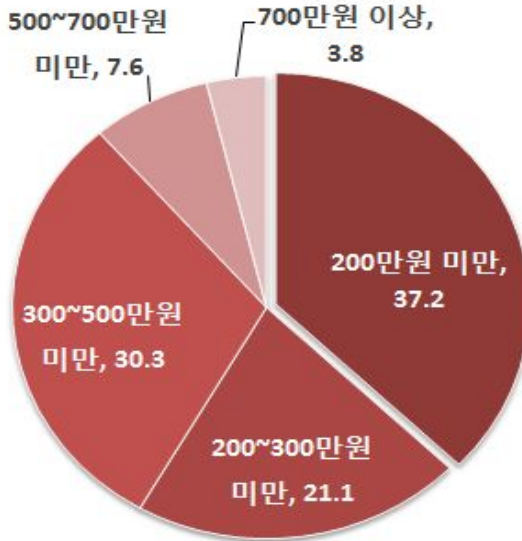
<표 3-10> 인천시 월평균 소득 현황(2013)

(단위: %)

구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인천전체	37.2	21.1	30.3	7.6	3.8
중구	47.8	21.7	24.1	4.4	2
동구	34.6	25.8	33.8	4.3	1.5
남구	33.9	21.8	35.5	5.8	3
연수구	27.8	17.1	33.8	11.5	9.8
남동구	32.8	18.1	34.7	9.4	5
부평구	32.2	23.8	32.2	8.5	3.2
계양구	42.1	23.8	26.5	6	1.7
서구	32.7	22.3	30.5	9.6	4.8

주: 군단위인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

자료: 인천광역시(2014),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보고서 참고.



<그림 3-14> 인천광역시 월평균소득 현황(2013)

3) 실업률 현황

지난 2000년도부터 최근 2013년까지의 인천시 실업률은 전체 평균 5.4%에서 4.2%로 0.8%정도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15-29세의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0-59세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실업률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0년도에 비해 2013년에는 1.4%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60세 이상 연령층도 실업율이 증가와 감소가 조금씩 보이지만 최근 2013년은 2000년도에 비해 0.6%정도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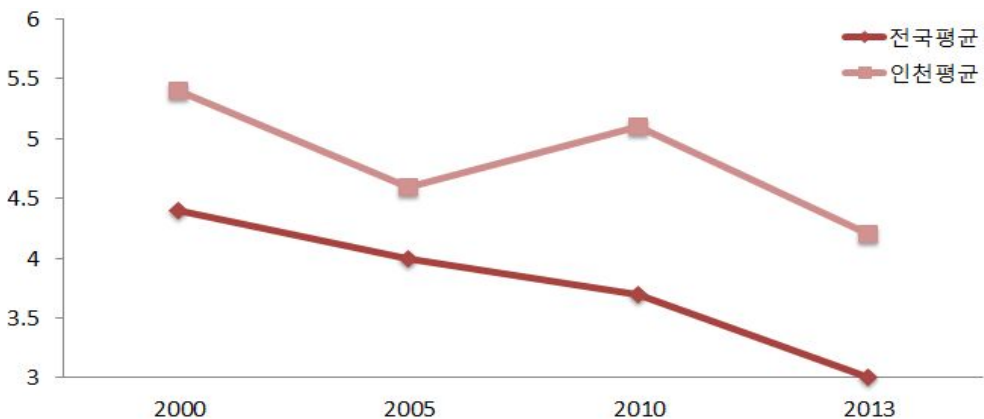
인천시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11> 인천시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3
계	5.4	4.6	5.1	4.2
15 - 29세	8.1	8.3	8.5	9.3
30 - 59세	4.6	3.5	4.2	3.2
60세이상	3.6	3.5	4.8	3.0

자료: 인천광역시(2014). 2014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보고서 참고.



<그림 3-15> 전국 및 인천시 실업률 비교

제2절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추진 체제 및 인프라

1. 평생교육 업무 추진 체제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 현황

인천광역시의 평생교육 업무 추진 체제는 교육기획관 내의 평생교육팀이다. 그리고 평생교육팀이 지원·운영하고 있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도 인천시의 평생교육 업무 추진 체제 중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2>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 및 직원 현황(2014)

구분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인원 (명)	평생 교육사	구성
인천시	교육기획관실-평생교육팀	4명	-	*팀장1, 주무관2, 실무관1
	인천평생교육진흥원	8명		원장1, 행정팀3, 교육팀4,
중구	가정교육과-교육지원팀	3명	-	*팀장1, 직원2
동구	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	2명	-	*팀장1, 실무관1
남구*	평생학습과-평생학습팀	5명	3명	*팀장1, 실무관4
연수구*	교육지원과-평생교육팀	5명	3명	*팀장1, 실무관4
남동구*	평생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3명	1명	*팀장1, 직원2
부평구*	평생학습과-평생학습팀	5명	2명	*팀장1, 주무관1, 실무관1, 평생교육사2
계양구	교육문화과-평생교육팀	3명	-	*팀장1, 실무관2
서구*	인재육성과-평생학습팀	5명	-	*팀장1, 실무관4
강화군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	-	평생교육 예산집행은 노인복지팀
옹진군	안전행정과-교육지원팀	-	-	

자료: 군·구 홈페이지 부서 업무 소개 참고.

주: * 표시는 인천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구임.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구의 부서와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

부분이 교육 관련 분야나 여성이나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과) 아래에 학교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두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과나 팀 차원에서 모두 평생교육 관련 명칭을 사용하고,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선정된 서구를 제외하면 모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 비지정도시의 경우 교육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팀 내에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가 대개 1명이 있거나, 아니면 부서명은 평생교육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지원과 평생교육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거나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예 없는 경우(강화, 옹진)의 경우도 있어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애로점이 있다.

2) 평생교육 업무 예산 현황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 대체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체 예산 대비 평생교육 분야 예산의 비율도 비슷한 편이다. 인천시는 전체 예산 대비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이 0.03%이고, 남동구가 0.35%로 평생교육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구들이 비지정도시들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¹⁴⁾

<표 3-13> 인천시 평생교육 예산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3		2014	
	실제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실제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인천시	1,645,567	0.04	1,527,997	0.03
중구	69,165	0.03	51,965	0.02
동구	45,440	0.03	44,800	0.03
남구*	431,593	0.13	469,340	0.12
남동구*	136,020	0.33	164,430	0.35
연수구*	464,100	0.18	856,416	0.28

14) 강화군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많아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2013		2014	
	실제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실제 예산	전체예산 대비 비율
부평구*	262,129	0.06	244,377	0.05
계양구	176,220	0.07	575,749	0.2
서구*	323,620	0.09	322,670	0.07
강화군	100,000	0.03	696,709	0.20
옹진군	3,000	0.002	3,000	0.001

주1: * 표시는 인천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구임.

주2: 계양구의 경우 계양국제여학관 운영지원 포함, 그러나 도서관 운영 예산 제외.

주3: 연수구의 경우 2014년도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예산 포함.

주3: 전체예산은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자료: 인천시청 및 군구청 홈페이지 예산서 참고.

서울이나 경기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이 경기가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0.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서울의 경우 0.04%를 나타낸다. 인천이 0.03%로 2013년도보다 약간 줄어들어 경기, 서울보다 적은 비중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처지이다.

2. 평생교육기관 현황

1) 평생교육기관 전체 현황

인천광역시 관내 모든 평생교육기관 현황이 정확히 조사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2011년도 인천시가 조사했던 평생교육DB를 기초로 한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5)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고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지만, 전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DB(2011) 자료도 정확성에 일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입 가능한 최근의 자료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을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표 3-1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기관 기본 현황(2011)

구 분		평생교육 시설 수	프로그램 수	학습인원	
합 계		760	7,869	816,088	
평생교육 분야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	준형식	소 계	-	11,993	
		고등기술학교	1	-	120
		각종학교(고등)	1	-	212
		방송통신고	2	-	695
		학교형태 학력인정 (중학)	2	-	527
		학교형태 학력인정 (고등)	3	-	3,449
		기능대학	1	-	2,981
		특수대학원	15	-	4,009
	비형식	소 계	360	3,861	346,428
		대학부설	9	552	21,056
		원격형태	14	380	169,512
		사업장부설	19	1,324	47,168
		시민단체부설	23	129	5,736
		언론기관부설	10	22	958
		지식인력 개발형태	35	387	49,258
평생학습관		20	1,067	36,347	
학원(평생교육직업학원)	230	-	16,393		
기타 평생교육 기관	소 계	375	4,008	457,667	
	주민자치센터	144	1,493	258,867	
	직업훈련기관	29	54	2,230	
	도서관	45	320	6,199	
	사회복지시설	28	394	36,685	
	노인복지시설	35	458	96,327	
	장애인복지시설	17	38	929	
	여성사회교육시설	7	221	13,580	
	청소년복지시설	18	199	14,588	
	기 타	52	831	28,262	

자료: 인천광역시(2014). 201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참고.

※ 기타 : 문화원, 아동복지종합센터, 예총국악회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 평생교육프로그램 수 및 학습인원 : 기관별 프로그램 수 및 학습인원 합계

2011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는 평생교육법에 등록된 준형식기관이 25개, 비형식기관이 360개이고,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375개이다. 따라서 모든 평생교육기관은 760개로 집계된다. 프로그램 수는 7,869개이며, 학습인원은 816,08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2014년의 인천시 평생교육기관 현황을 인천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관련 법에 따른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에서 주민자치기관과 도서관, 복지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인천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현황(2014)

구분	인천	중구	동구	계양	강화	옹진	서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국가 및 지자체	43	3	5	3	4	0	4	6	6	5	7
학교, 학교부설, 사내대학, 원격대학	13	1	1	2	0	0	0	5	2	1	1
문화센터	57	2	0	10	1	0	9	5	6	8	16
시민사회 단체	55	5	4	3	3	0	4	8	9	15	4
교육산업 관련시설	38	0	0	2	0	0	9	10	8	4	5
사이버 학습 관련시설	15	1	1	1	0	0	1	1	0	5	5
다문화 관련 시설 및 단체	16	1	2	1	1	0	2	1	2	5	1
여성 관련 시설	11	1	0	1	1	0	1	1	1	2	3
직업훈련 관련시설	35	1	1	1	0	0	1	1	2	26	2
청소년 관련시설	34	2	1	2	4	0	4	2	8	10	1
복지관	75	3	8	9	0	0	8	12	20	8	7

구분	인천	중구	동구	계양	강화	옹진	서구	남구	연수	남동	부평
문화예술 관련시설	32	2	2	2	2	0	3	8	3	7	3
박물관 미술관	24	4	1	0	3	0	3	6	3	2	2
도서관	210	5	6	13	2	3	43	27	31	40	40
주민 자치기관	127	11	11	11	0	0	20	21	12	19	22
기타	78	4	6	4	1	0	6	5	17	20	15
총계	863	46	49	65	22	3	118	119	130	177	134

주: 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북카페 포함.

자료: 인천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2014. 12월 기준)

2)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현황

다음은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현황은 2011년 인천시가 조사한 평생교육DB에 근거해서 파악한 배은주(2013)의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관할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2011년 기준 평균 약 1.4명이고, 그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평균 약 0.2명이다.

<표 3-16>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수 기관 현황(2011)

(단위: 개)

담당자 수(명)	기관 수
0	37
1	166
2	26
3	13
4	6
5	5

담당자 수(명)	기관 수
6	1
7	1
8	2
9	1
16	1
총계	259

자료: 배은주(2013).

주: 본 자료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기관을 주 대상으로 함.

* 평생교육 담당자가 16명으로 많은 기관은 직업교육 전문학교이기 때문임.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는 1명인 기관이 166개로 대부분이며, 아예 없는 곳도 37개나 된다.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평생교육 사업이 그 기관의 주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평생교육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인천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수는 0명인 기관이 대부분이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명인 기관이 33개로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7>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수 기관 현황(2011)

(단위: 개)

보유자수(명)	기관 수
0	215
1	33
2	8
3	2
4	1
총계	259

자료: 배은주(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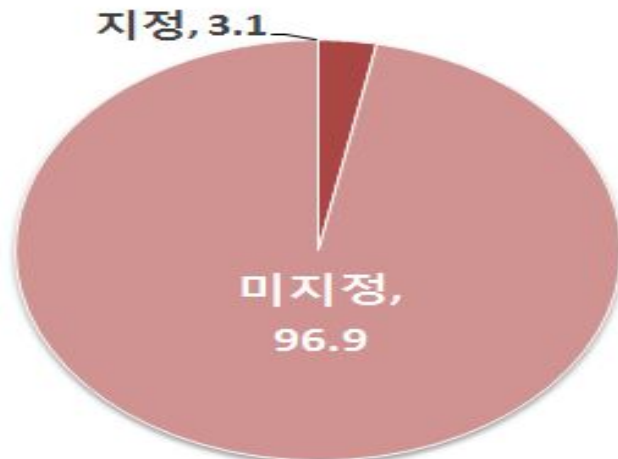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별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¹⁶⁾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관할의 기타 법령 기관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은 총 8개이다.

<표 3-18> 평생학습관 지정 기관 현황(2011)

(단위: 개, %)

구 분	지정	미지정	총계
총 계	8 (3.1)	251 (96.9)	259 (100)

자료: 배은주(2013).



<그림 3-16> 인천시 평생학습관 지정 기관 비율 현황(2011)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관할의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6개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기타 법령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한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전체적으로 학점은행제 같은 전문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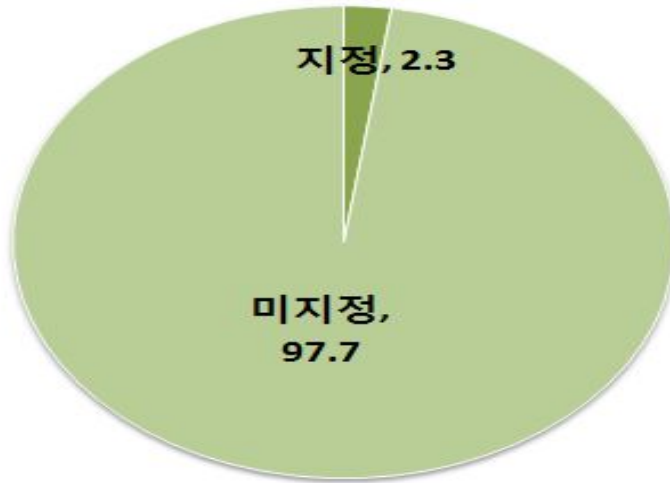
16) 인천시교육청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은 2011년 총 20개(인천시평생학습관 제외)이며, 여기에는 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8개,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1개, 일반 평생교육기관 11개가 속해 있음.

<표 3-19> 학점제 운영 지정 평생교육기관 현황(2011)

(단위: 개, %)

구 분	지정	미지정	총계
기관 수	6 (2.3)	253 (97.7)	259 (100)

자료: 배은주(2013).



<그림 3-17> 인천시 학점제 운영지정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3.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 자료도 기초자치단체 관할 기타 법령에 의거한 평생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평생교육DB에 근거해서 살펴본 배은주(2013)의 보고서에 기초해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1) 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기초자치단체 관할의 평생교육기관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2011년 기준으로 3,984개로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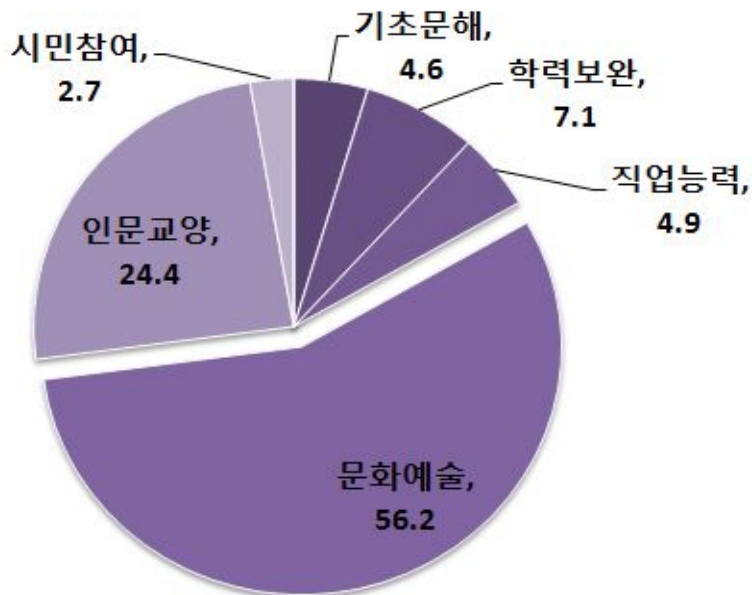
<표 3-20>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

(단위: 개, %)

구분	총계
기초문해	183 (4.6)
학력보완	284 (7.1)
직업능력	197 (4.9)
문화예술	2,240 (56.2)
인문교양	972 (24.4)
시민참여	107 (2.7)
비고	1 (0.0)
총계	3,984 (100)

자료: 배은주(2013).

주: 연수구 비고는 청학노인문화센터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건강증진, 미교육, 평생교육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3-18>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2)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남정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수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대다수 수강자는 여성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21>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1)
(단위: 개)

구분	기관 수
일반 시민	1,840
미취학 아동	416
초등학생	710
중고등학생	91
노인	682
여성	232
장애인	64
학부모	23
새터민	0
다문화가족	49
직장인	20
한부모가족	1
교원	1
비고 (미확인)	11
총계	4,140

자료: 배은주(2013).

주: 교육대상 중복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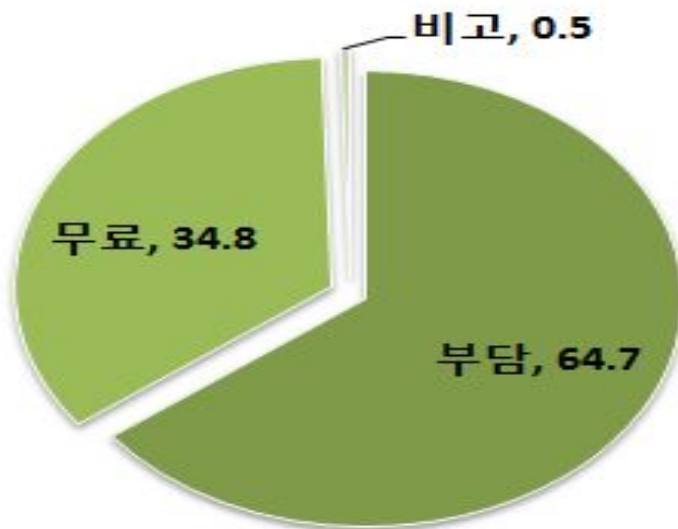
3) 프로그램의 교육비 부담 현황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관할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수강생들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64.7%이고,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34.8%이다. 교육비를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기는 하지만, 특히 저소득계층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비가 매우 적게 책정되므로 인천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교육비에 의한 부담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3-22>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비 부담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1)
(단위: 개, %)

구분	총계
부담	2,578 (64.7)
무료	1,386 (34.8)
비고	20 (0.5)
총계	3,984 (100)

자료: 배은주(2013).



<그림 3-19> 교육비 부담 여부에 따른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4) 학습계좌제 인증 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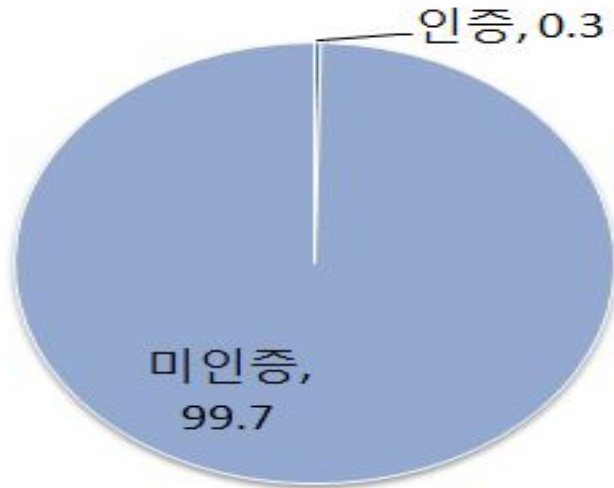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관할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인증 프로그램이 13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적다는 의미이다.

<표 3-23> 학습계좌제 인증 프로그램 현황(2011)

(단위: 개)

구 분	인증	미인증	총계
총 계	13	3,971	3,984

자료: 배은주(2013).



<그림 3-20> 인천시 학습계좌제 인증 프로그램 비율 현황(201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Incheon

제4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정책

제1절 평생교육 관련 조례와 발전계획

제2절 평생교육 추진 정책

제3절 시사점

제4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정책

제1절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적 지원체제

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지원체제

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인천광역시에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2009년 10월 12일에 제정, 공포하였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책무가 인천광역시장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 평생교육협의회와 인천시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다음은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표 4-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세부 내용

구분	법 구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 (정의)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제3조 (평생교육 진흥책무)	-인천광역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 권장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시행계 획의 수립·시행)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필요한 자원 확보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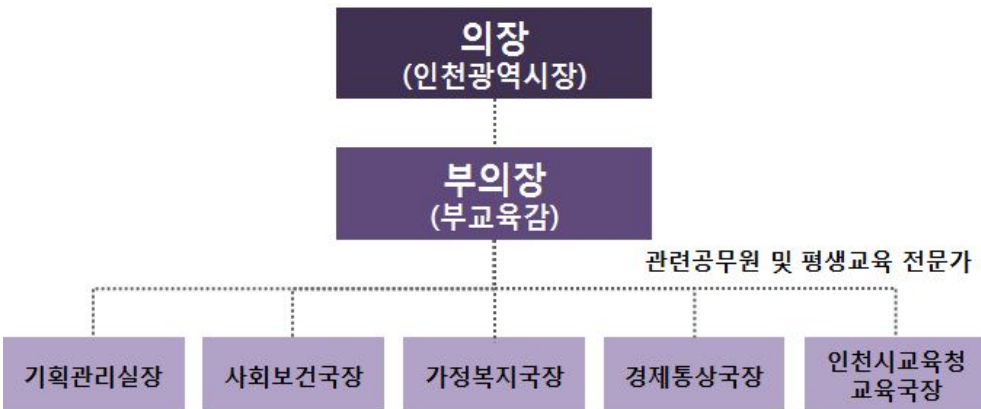
구분	법 구분	내 용
	제6조 (자료요청)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제2장 평생교육 협의회	제7조 (설치)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제8조 (기능)	-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 (구성)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부교육감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간사는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
	제10조 (임기 등)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의장은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
	제11조 (의장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대행
	제12조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 심의 참여 불가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제13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 지급
	제14조 (운영규정)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함
제3장 평생교육 진흥원의 설치·운영	제15조 (설치 등)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교육감과 협의
	제16조 (업무)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상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학습계좌제 운영

구분	법 구분	내 용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지역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시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지정절차 등)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 -평생교육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 진흥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대표성, 전문성, 접근성, 연계성, 장래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로 지정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제18조 (조직 및 시설)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 관장하며, 소속 직원 지휘·감독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둠
	제19조 (운영직원 배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제21조 (지정취소)	-협약서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2조 (사업계획서 승인 등)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름 -매년 8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
	제23조 (운영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
제4장 보칙	제24조 (이용자 안전조치)	-이용자에게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도록 조치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25조 (지도·감독)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도·감독
	제26조 (포상)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자료: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에는 시도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을 의장, 부교육감을 부의장으로 하고, 관련 공무원과 평생교육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사회보건국장, 가정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위촉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조직도(2014)

2.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지원체제

1)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 조례 현황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모두 제정하였다. 연수구가 2004년도에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동구가 2013년 말에 가장 늦게 제정하였다.

<표 4-2>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 명칭	제정일/개정일	소관부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2. 12. 31.	주민생활지원국 가정교육과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3. 12. 23.	기획감사실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6. 3. 31/ 2010. 9. 16	주민생활지원국 평생학습과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4. 6. 9/ 2012. 9. 21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7. 4. 20/ 2014. 10. 10	주민생활국 평생교육지원과
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05. 9. 23/ 2012. 2. 27	문화환경국 평생학습과
계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2. 10. 5.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과
서구	평생교육 조례	2008. 3. 19/ 2013. 8. 5	총무국 인재육성과
강화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3. 7. 5	기획감사실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4. 12.	

자료: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기초자치단체들이 제정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의 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대부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과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3>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총칙	목적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임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지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과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설치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둌.
	기능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함.
	구성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12명 이내로 구성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의장 등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 총괄,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 불수행시 직무 대행.
	회의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0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개최
평생학습 센터 설치 및 운영	설치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증진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관)를 설치 운영하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
	기능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평생교육종사자 연수 및 교육, 평생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학습상담,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독 교육지원, 평생교육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운영	담당부서 운영 및 필요시 민간위탁 가능
	수강료 징수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징수 가능, 필요한 경우 일부 강좌 무료 운영 가능.
	운영 요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사를 둘 수 있음.
	수료증 등 교부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수료증 교부 가능.
보칙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장은 연1회 이상 지원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야 함.

자료: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조례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협의회 현황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협의회는 실제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곳은 평생학습도시인 5개구와 중구 정도이며, 나머지 군구들은 아직 협의 단계이다. 기

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맡으며, 그 외의 위원들은 주로 평생교육 관련 업무 부서장, 기초자치단체의원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평생교육 관련 분야 전문 교수, 관할 구역 내 초·중·고등학교장, 평생교육 관계 기관장, 그 외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다. 보통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협의회가 하는 기능은 첫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둘째,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의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다.

제2절 평생교육 추진 정책

1. 제1차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인천시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추진 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2010년에서 2014까지의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처음 마련된 것이다. 이제 그 이후의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 실시된 인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은 인천의 일반환경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당시의 평생교육 현황을 분석한 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수요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인천평생교육의 비전과 미션을 설정한 후, 주요 추진과제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주요 추진과제와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인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일반 환경	인구 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의 인구는 증가 추세이므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지역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 · 고령화 사회이나 노인의 평생학습 시설 부족. · 군구별 여성인구 분포의 차이에 따라 성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사회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평생교육 방향 설정 필요.
	산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RDP의 증가 추세로 평생교육 수요 증가 예상.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 중이므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평생교육 방향 정립 필요. ·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직업훈련기회 확대 필요.
평생 교육 현황	추진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교육지원팀에서 기획관리실 교육지원담당관 평생교육팀으로 변화. · 교육청은 교육국 소속의 평생교육체육과 내 평생교육팀이 담당. · 평생학습도시 3구와 예비평생학습도시 1구가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3구와 서구에는 평생교육 전담업무부서가 편성되어 있으나, 그 외에는 주민복지과 등의 소속으로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족. · 평생교육법 상 시도지사의 책무와 실제 교육청 업무가 혼재하고 있어, 시청과 교육청 간의 평생교육 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 요구됨.
	제도적 지원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되어 있으나 실무협의회 구성 필요.
	평생 교육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청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 투자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161억 원)임. · 인천시교육청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인천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 활성화와 협력 사업 모색 필요. · 각 실·국 내 평생교육 유사 업무의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인드 제고 교육 필요.
	평생 교육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형식 평생교육기관은 24개소(전국의 2.5%), 학습자는 8,805명(전국의 1.2%)이지만, 원격/사이버대학 부재, 특수대학자원 부족으로 학습자 수 적은 편임. ·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은 104개, 프로그램은 3,055개, 학습자 수 연간 146,552명임. · 기타 법령의 평생교육기관은 227개, 프로그램 수 3,093개, 학습자 수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p>연간 992,657명으로 조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밀집 도시개발지역에 평생교육복합화시설 배치 고려. · 평생학습도시와 비학습도시 간 인프라 격차와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존재하며, 시설별 특성화가 부족함. · 평생교육기관 등록화를 위하여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평생교육 수요 조사 결과	결과와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민의 평생교육 인지도는 61.5%로 상당히 높고, 평생교육 참여의향을 역시 68.9%로 높지만, 평생학습을 인지하는 경로의 차이가 성별, 지역별로 존재하므로 세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인천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3%로,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선호하므로, 지역별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필요. · 인천광역시의 평생교육 방향을 “직무능력개발”과 “시민교육” 활성화로 정립하고, 기초자치단체 또는 평생학습도시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차별화를 통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전문인력 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필요.
평생교육의 비전과 전략	미션과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평생교육진흥계획의 기본 철학은 교육-노동-복지-문화의 통합적 접근 지향 ·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 으뜸도시, 인천」 구현으로, 인천시민 스스로 배움으로써 지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일-배움 시스템을 만들고 행복의 기본 권리 향유.
	주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기반 구축 · 시민참여 평생교육체제 구축 · 생애평생교육과 일자리 연계 · 평생교육복지 구현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인천시 추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총괄·전담 부서 설치 · 지역평생교육 파트너십 기구의 활성화 · 권역 및 세계 평생교육 기관 연계 발전방안 모색
	인천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담당관실로 인천시 평생교육 업무 일원화 ·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 ·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과 사업로드맵에 대한 공유 · 중기계획과 연동하여 평가 및 결과 반영 가능한 제도 마련 · 3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시와 군구/ 권역별 평생학습벨트 조성 및 특성화/ 군구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
	인천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전문성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대영역	중영역	세부 내용
	생교육 진흥원 설립, 운영	독립법인형(재)이 적절함.
	노인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개념, 시설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공통기반 구축 · 생애주기별 노년교육을 위한 확대된 시간적 기반 구축 · 지역밀착형 노인 평생교육을 위한 확장된 공간적 기반 구축
	여성 및 다문화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평생교육 수요 대응 및 인력개발과의 연계 강화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과 여성일자리 지원 · 세대별, 계층별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선주민들의 다문화능력 제고 · 이주민들의 정착능력 제도 · 다문화평생교육 기반 구축
	장애인 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지원 필요 · 장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육성 및 지원 ·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과 관리 업무 및 전달체계 정비 ·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환경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자료: 인천광역시(2010).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제1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인구증가 추세에 맞추어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시설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향후 인구의 증가 추세는 단기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의 산업구조적 특성에 적절한 직업평생교육은 높은 실업율과 높은 주부층의 비율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평생교육의 업무 추진체제가 인천시청의 교육지원담당관 내 평생교육팀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전해 왔지만, 각 실국 내의 평생교육 유사 업무의

네트워크 구축과 마인드 제고는 여전히 미흡하여 교육지원담당관 내 평생교육팀의 위상 제고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은 실현되었으나 독립법인형이 아니고 규모가 작아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성화 과제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청과 교육청 간의 평생교육 업무 협력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서는 권역 및 세계 평생교육 기관 연계 발전과 권역별 평생학습벨트 조성 및 특성화 등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들 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교육이나 여성 및 다문화교육, 장애인 교육의 활성화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며,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최근 주장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인천광역시청 및 시교육청 평생교육 사업

1) 인천광역시청 평생교육 사업

인천광역시는 2013년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도시 인천」 구현을 목표로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5월에 개원하였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개원으로 이전까지 인천시교육청 주도의 인천평생교육 축제를 ‘인천평생교육박람회’로 확대, 개편하여 개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평생 학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학습형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도부터 제3차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에는 「평생학습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사

회발전 동력으로서의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학습과 일이 연계된 행복학습사회 구현,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행복학습사회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 가지 추진계획 범주별로 세부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5> 인천광역시청 평생교육 추진 정책(2014)

추진 계획	⇒	1.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1-1.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2. 인천평생교육협의회 운영 1-3.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1-4. 만·관 평생교육 종사자 워크숍 1-5. 인천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1-6. 평생교육 실태 및 평생학습 욕구 조사 1-7. 평생교육 강사은행 운영 1-8.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1-9. 평생교육정책 포럼
	⇒	2.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2-1.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2-2. 다문화가족 평생학습 지원 2-3. 북한이탈주민 평생학습 지원 2-4. 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5. 인천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2-6.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2-7.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	3. 학습과 일의 연계	3-1. 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3-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3-3. 취업지원담당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3-4.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3-5.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6.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3-7. 여성능력 배양 및 취·창업 교육 지원 3-8.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교육
	⇒	4.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4-1. 모자건강관리 프로그램 4-2. 찾아가는 부모교육 4-3. 아동기 평생학습 지원 4-4. 인천영어마을 운영 4-5. 웅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

⇒		4-6. 청소년기 평생학습 지원 4-7. 가족단위 평생학습 지원 4-8. 노년기 평생학습 지원
	5. 시민참여 행복학습사회 지원	5-1. 제2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 5-2. 인천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 5-3.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 5-4. 인천평생교육 웹진 발행 5-5. 평생학습 재능기부 인프라 구축 5-6.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7.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5-8.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9. 시민 사회체육프로그램 운영

자료: 인천광역시청(2014). 201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p.10-11.

평생학습에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이외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평생교육 업무 주관 부서는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처지이며, 유관 부서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평생교육계획은 유관 부서의 추진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표기한 사업개요이다.

<표 4-6> 2014 인천시 평생교육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증감
		2014년	2013년	
합계		42,556	40,805	1,751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597	621	24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개소	464	410	43
인천평생교육협의회 운영	1회	3	3	0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2회	10	20	20
민·관 평생교육 종사자 워크숍	200명	30	30	0
인천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1식	20	133	113
평생교육 실태 및 평생학습 욕구 조사	1회	30	25	5
평생교육 강사은행 운영	1식	5	0	5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4개 도시	20	0	20
평생교육정책 포럼	2회	15	0	15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증감
		2014년	2013년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		2,988	3,114	126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5개소	196	219	23
다문화가족 평생학습 지원	3개 사업	1,458	1,586	128
북한이탈주민 평생학습 지원	14개사업	100	100	0
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90,000명	1,018	1,018	0
인천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180명	50	35	15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3,500명	137	137	0
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120회	29	19	10
학습과 일의 연계		6,884	5,835	1,049
학습형 일자리 공모사업		100	124	24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3,000명	1,050	1,050	0
취업지원담당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150명	15	12	3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1,350명	10	10	0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6,650명	2,000	1,350	650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	3개 사업	51	45	6
여성능력 배양 및 취·창업 교육 지원	5개 사업	3,382	2,982	400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교육	8개 사업	276	262	14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29,281	28,577	704
모자건강관리 프로그램	10,000명	90	90	0
찾아가는 부모교육	42회	113	100	13
아동기 평생학습 지원	4개 사업	50	45	5
인천영어마을 운영	11,250명	3,060	3,058	2
웅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	1,300명	600	600	0
청소년기 평생학습 지	11개사업	10,271	10,144	127
가족단위 평생학습 지원	5개 사업	22	22	0
노년기 평생학습 지원	5개 사업	15,075	14,518	557
시민참여 행복학습사회 지원		2,806	2,658	148
제2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	50,000명	100	130	30
인천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	160,000명	108	82	26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	39명	10	20	10
인천평생교육 웹진 발행	3회	4	0	4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증감
		2014년	2013년	
평생학습 재능기부 인프라 구축	1식	5	0	5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3개기관	1,457	1,429	28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	77	6	71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0개사업	649	579	70
시민 사회체육프로그램 운영	6개 사업	396	412	16

자료: 인천광역시청(2014). 201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p.13-14

2013년도보다 2014년도 사업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으나 전체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취약계층 평생학습지원 분야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학습과 일의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시민참여 행복학습사회 조성 분야는 예산이 조금 증가하였다. 이는 제3차 국가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분야여서 이의 흐름에 맞추려고 하는 사업 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처지이며, 아직도 미비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 및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분야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이다. 특히 취약계층 평생교육은 일 자리 사업과도 연계되어야 하므로 직업평생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행복학습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이 강한 평생교육 분야, 예컨대 학점인증제나 평생학습계좌제,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가 2013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함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주로 평생교육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과, 평생교육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평생교육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는 일, 여러 평생교육기관에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다.

<표 4-7>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추진계획(2014)

사 업 명		주요 내용
평생교육 기반구축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시, 군·구별 평생교육 정보공유를 통한 표준 정보체계 구축
	평생교육 통계 실태조사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통한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의 안정화
	지역주민 평생학습 욕구조사	평생학습 욕구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권역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함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협력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평생교육강사은행 운영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 및 강사정보 공유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
평생교육 역량강화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정보 공유와 관계자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을 통한 평생교육 실천 역량 향상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평생학습 균형발전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맞춤 컨설팅으로 종합발전 도모
	평생교육 정책포럼	지역 평생교육 역량 증진 및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정책 도출
평생교육 문화조성	인천평생학습 박람회개최	평생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임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개최	인천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문화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타 지역의 평생학습 현황과 발전 방향 공유
	평생학습 시민기자단 운영	시민기자단을 통해 평생학습 현장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기회 확산
	웹진 운영	빠르고 정확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평생교육 관심 증대 및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 재능기부 인프라구축	재능기부 게시판 운영을 통해 재능기부 희망 시민과 수요기관을 빠르게 연결하고 평생학습 재능기부 문화를 조성함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습형일자리 특화 공모사업	지역 특성이 반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사 업 명		주요 내용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삶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 확대
	책 읽는 평생학습 도시 인천 지원 공모사업	'2015 세계 책의 수도'유치에 따라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책 읽는 평생학습 도시 인천 실현

자료: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추진계획서(2014), p.2.

2)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도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에는 교육청이 지자체 내의 평생교육 주관 추진기구였기에 인천에서는 인천평생학습관과 주요 도서관 등을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를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주로 평생교육법령상의 준형식·비형식 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형태, 학원, 야학 등의 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4-8>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사업(2014)

사 업 명	내 용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공공, 민간)운영	지역별 평생학습관 지정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사회통합
	민간 평생학습관 운영 내실화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2단계 시범 지정	효과적인 시범 지정 운영을 위하여 우리교육청 직속기관 공모선정
	예산지원 및 이수자에 대해서 향후 3단계 진입을 위해 학습이력 누적 관리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학교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명	내용
운영 지원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2009 개정교육과정상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지역자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배움터로서의 학력인정시설 역할 강화
	평생교육시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및 혜택 부여
비정규학교(야학) 지원	문해교육기관의 육성·지원을 통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평생교육 제공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원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학원·교습소의 정보공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학원설립·운영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내실화

자료: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 유관기관 평생교육 주요사업 p.23-25.

3.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사업

1)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사업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실적과 평생학습 추진 계획이 우수한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2001년도부터 추진하였다(배은주, 2013).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역의 학습력 향상을 통한 지역 학습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추진 인프라를 정비하고 양

질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혁신에 필요한 역량 강화'(고영상, 2013, p.3) 등이다.

인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현재 5개구이다. 연수구가 가정 먼저 지정되었고, 부평구와 남구, 그리고 2011년에 남동구가, 2014년에 서구가 지정되어 총 1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5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다. 평생학습도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략 지역 내 평생교육 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습자 지원 등 세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별로 지정된 기간이 달라 평생학습도시에서 운영하는 강조점과 구체적인 사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구의 평생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다.

<표 4-9> 인천광역시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주요 업무 계획(2014)

구 분	주요 업무 계획
남구	학산선비대학 운영
	학산콜강좌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
	홍보물제작
	직무연수 및 벤치마킹 여비
	창조적 마을학교 운영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공모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부담금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운영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공공운영비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
	평생학습센터 물품 구입
	제2회 남구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구 분	주요 업무 계획
	전국 및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남구평생학습포럼 개최
연수구	평생학습 나눔터 운영
	평생교육관련 실무자 워크숍 개최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평생학습 소식지(나눔터) 발간
	평생학습 홍보(성과집 발간)
	평생학습 축제(박람회) 참가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
	연수구민대학 운영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지원
	주말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및 연수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아파트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육아 및 부모교육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교양강좌 운영
남동구	제1회 남동구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학습 홈페이지 기능보강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성과집, 홍보물 등 운영비
	마을 행복학습지원센터 지정 운영
	마을 평생학습 추진 워크숍 개최
	행복한 배움길가이드 운영
	비문해 성인 및 다문화 교육지원
	주경야독, 직장인 찾아가는 강좌지원
	<삶의 성찰, 인문학> 강좌 지원
	경력단절여성, 찾아가는 강좌 지원
	청소년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구 분	주요 업무 계획
부평구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지원
	부평어르신학교 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학습동아리 연수
	강사 연수
	기관 실무자 연수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
	권역별 학습네트워크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부평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축제 참가(인천·전국)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부평구 평생교육 분과위원회 운영
	추진사업 총람 및 소식지 발간
	부평학스토리텔러 및 시니어 이야기활동가 활동 및 교육
	평생학습 재능(교육)기부
	서구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 운영지원	
서구아카데미 운영	
서구 평생학습 홍보물제작	
서구사이버평생학습관 유지보수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자료: 인천광역시청(2014). 201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p.152-155.참고.

서구의 경우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른 자치구와는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다. 다른 자치구들은 이미 중앙정부의 중점 계획에 발맞추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구는 아직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필요하다면, 서구도 이제는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과 중장기 계획,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평생학습도시 비지정도시의 평생교육 사업

2014년도에 서구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비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강화, 옹진을 포함하여 5개 군·구이다. 계양구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의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 자치단체이다. 특히, 강화와 옹진은 군 단위로서 농어업 종사자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에 용이하지 않은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다. 옹진군의 경우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더더욱 여건이 불리하다. 중구의 경우 신도심으로 조성된 영종도를 가지고 있어 예산 면에서의 여건은 불리하지 않지만, 영종도라는 섬과 원도심 지역인 내륙으로 지리적으로 구분된 지역을 가지고 있어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두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갖추었고, 평생학습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도시의 평생교육 주요 업무 현황이다.

<표 4-10> 인천광역시 비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주요 업무계획(2014)

구 분	주요 업무 계획
중구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
	평생학습기관 및 운영 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발간
	중구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동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홍보물 유인비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인천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설치운영

구 분	주요 업무 계획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
	동구 평생학습한마당
계양구	도서관 운영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
	평생교육 기반 조성
	청소년 미래직업 비전 축제
	독서문화 진흥
강화군	강화군 평생교육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강화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평생교육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옹진아카데미 운영)
	체험학습 지원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

자료: 인천광역시청(2014). 201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p.142-145.참고.

위의 내용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여건상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들도 꽤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현가능한 계획이었기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현되었다. 2014년도에 실행하지 못한 계획들은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Incheon

제5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제1절 정책적 시사점

제2절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제5장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제1절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

인천시의 전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향후 10대, 20대, 30대의 젊은 층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4, 50대의 중장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고령화 사회에 초점을 맞춘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노년층의 분포가 매우 높지만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강화·옹진군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 동구, 남구에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군단위 지역 및 원도심 지역의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의 중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인천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여성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여성인구 외에도 다문화인구, 장애인 인구 등이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의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실업율과 많은 서비스판매직 등의 산업구조적 특성, 저소득계층이 많은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이에 적절한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별, 평생교육기관별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여성인구의 경우 4,50대의 중장년층 여성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부평구와 남동구에 가장 많은 여성인구가 분포하고 있으며, 계양구의 경우 중장년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고, 다문화 인구의 경우 남동구와 서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

고 있고, 장애인 인구의 경우 부평구와 남동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인구분포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다문화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은 이들의 역량을 적극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인구의 경우 이들의 특징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역에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성별, 장애종류별로 이들에게 적절한 평생교육이 생애주기별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속에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3.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인천시의 직업구조 및 소득계층별 특성을 살펴보면 높은 서비스판매직 및 사무종사자, 높은 실업률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여성인구인데, 별도의 직업이 없는 주부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인천에는 직업능력개발에 중점을 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하여 학습자의 교육적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부담비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학습과 일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가 강제인 인천의 특징을 살려 이와 연계한 직업교육 및 훈련과 진로직업체험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는 인천의 장점을 살린 평생교육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4.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과 특성화

인천 자치구들의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제1차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에는 평생학습도시가 3개구였지만, 2014년 현재에는 5개구로 늘어났으며, 중구와 동구에서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평생학습 컨설팅을

받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자치구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구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은 보다 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필요한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들의 특성화, 차별화이다. 평생학습도시별로 지역여건에 적절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평생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적·물적 기반 구축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도 구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들도 평생교육 진흥 관련 조례를 대부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최소한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조례에 규정된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실제적으로는 구성·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따라서 향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평생교육협의회를 실제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에 교육지원담당관 내 평생교육팀이 생김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업무 전담팀이 생겨 평생교육업무 추진 기반을 갖추었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자치구들도 평생교육 업무 전담팀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비평생학습도시로 남아 있는 자치구나 강화, 옹진 같은 군에는 아직도 평생학습 업무 전담팀이나 부서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업무 추진체제를 인천광역시 내 군구까지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화나 옹진의 경우 군이라는 지역 여건상 전담 부서나 팀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면, 관련 부서 내에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 내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의향률이 비교적 높은 데 비해, 평생학습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평생교육의 개념과 관련 업무에 대한 파악 및 인식 정도에서 평생학습도시와 비평생학습도시 간 차이가 있고, 평생교육사 배치에도 차이가 있어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도 차

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량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평생교육 추진 체제 간 역할의 차별화

실제적인 평생교육 기관 지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1차 중장기 계획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면이 있다. 평생교육 추진 체제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제대로 갖추어지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 구분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업무 추진 주체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천평생학습관과 몇 개의 도서관을 교육청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다. 고등평생교육이나 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은 교육청 관할의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평생교육 업무 연계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연계와 협력은 각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분담함으로써 더 원활해 질 수 있으므로, 인천시와 교육청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면서 협력해 나가는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7. 평생교육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증대

앞서 살펴본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현황을 고려해 보면, 인천의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평생교육기관과 인력이 필요하다.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들은 대개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은 약한 편이다. 인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고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이는 배은주(2013)의 지적처럼, 평생교육기관의 다양화

와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특히 고등평생교육기관의 육성도 필요하다. 예컨대, 전문성이 강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이버학습시설, 시민사회단체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학점은행제나 학습계좌제 등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인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보다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 평생교육복지의 미래 비전 구현

인천의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은 국가 평생교육의 중장기 계획과 연동되어 수립된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과 학습의 연계 등 여러 비전들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향후에는 세계적 동향과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 관점의 평생교육계획이 요구된다. 제1차 중장기 계획에서도 평생교육복지 구현이 과제로 제시되었으나 이는 보다 큰 범주의 비전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2절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계획 수립

인천시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라는 말도 있듯이, 평생에 걸쳐 배우고 익히는 것은 개인에게서도 매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일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그러하다.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이고 긴 안목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 평생교육의 중장기계획에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인천시의 인구학적 특성과 변화 추이, 산업구조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천은 타 지역보다 높은 실업율과 많은 저소득층, 높은 장애인 거주율 등의 특성

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성이 많은 지역이라 사회통합, 시민 의식 제고, 부모교육 등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대별, 성별, 계층별, 문화별, 장애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장기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인적 자원 개발과 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학습복지적 관점의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과 노인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2.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 공고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인천시에서는 평생교육 추진 기반이 구축되었다. 인천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과 더불어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도 개원하였다.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획관실 내 평생교육팀도 구성되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 평생교육 추진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최근 까지 모두 제정되었지만, 지역평생교육협의회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평생교육 업무 담당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평생학습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간 평생교육 추진 기반 구축과 사업 추진에 격차가 커서 학교 교육 못지않게 평생교육에서도 교육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전문 인력 배치에서도 격차가 커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적절한 평생교육 추진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천시 교육기획관 내 평생교육팀과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선발과 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업무 전담 부서와 평생교육협의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3. 평생교육 추진체제 간 역할 구분과 연계 협력

인천광역시 내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제는 인천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시교육청이다. 이들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더불어 연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중장기적 안목의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진,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지원과 육성, 평생교육 기관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관련 각종 자료 조사, 시민들의 평생교육 욕구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인천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평생교육법 상의 기관을 많이 관할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평생교육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추진 체제의 역할을 구분하여 중복을 줄이면서 상호 연계·협력하여 인천시 전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

인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는 곳은 인천시 교육기획관실의 평생교육 팀과 더불어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2013년 5월에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독립법인이 아니어서 그 업무 수행력과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망을 구축·제공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조사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초지자체 및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5. 도시개발 정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이제 평생교육은 전 국민, 전 주민이 참여가능하고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개발 정책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도시개발 정책에 의해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선다거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공주택이 확대되거나 마을만들기에 의해 마을이 재구조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경우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공간을 함께 만든다든지, 마을공동시설에 주민들의 학습공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이나 마을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자신들의 거주 마을이 재개발 또는 재구조화될 때 이러한 학습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직업적, 성별 특성이나 성향에 맞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배치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도시개발정책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인천의 평생교육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된 고등평생교육 그리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대학으로 대표되는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각각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학은 지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물질·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전

환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태껏 대학은 평생교육이 대학의 주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소홀히 해 왔고,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산학협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미비하였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시대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대학졸업 이후의 시기에 대하여도 고등교육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평생교육 차원의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원을 통한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7. 평생교육 전문 인력 선발과 활용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활용되어야 한다. 앞서 인천시 군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현황과 관련자 면담연구를 수행한 배은주(2013)의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순환직인 공무원들은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도 부수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탓에 평생교육의 개념이나 관련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인천의 평생교육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중심 업무부서나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서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주기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인천광역시는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2010년에 처음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5개년 동안 실행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론, 이것이 모두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계획이 하나씩 실행되

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인천의 변화하는 여건에 적절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인천이라는 지역 여건과 특성, 비전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단계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평생교육기관들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실제적인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한번에 전수조사를 다 하기 어렵다면 시청과 군구청 관할의 평생교육기관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교육청 관할의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인천시 평생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적 실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실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3). 경기도 평생교육중장기진흥계획.
- 고영상(201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접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2013년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사업 착수협의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 교육과학기술부(20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13~'17) 수립 연구.
- 교육부(2013).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3~2017).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3년 하계 평생교육 복유립 테마연수 결과보고서.
- 배은주(2013). 인천시 '비(非)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서울특별시(20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
- 양흥권(2008).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사업 관련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구미시·대한지방자치학회·환경정책학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지방자치발전방안과 첨단산업도시 구미시의 비전(2008. 4. 25. 구미전자정보기술원), pp.109-132.
- 이정석·임호(2013). 부산시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이충렬·윤명희·박종운·임현성(2009). 평생학습 기능확대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책 기능 강화방안.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인천광역시(2010).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 인천광역시(2014). 2014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보고서.
- 인천광역시(2014). 2014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 인천광역시·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 유관기관 평생교육 주요사업.
- 인천평생교육진흥원(2014). 2014 주요사업 추진계획서.
- 최은수(2012). 평생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 평생교육진흥원(2008). 북미 평생교육 정책 동향: 미국과 캐나다의 평생교육 동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원(2008). 영국 평생교육 정책동향: 영국 평생교육 정책의 전개와 동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원(2008). 일본 평생교육 정책 동향: 일본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동향과 그 과제.

희망제작소(2013). 해외 평생교육사례: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평생교육을 만나다.

Lengrand, P.(1975), *An introductions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Press.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UIL(2008). Medium-term strategy 2008-2013, <http://www.unesco.org/uil>

UIL(2014). Medium-term strategy 2014-2021, <http://www.unesco.org/uil>

국가통계포털, 2000-14년도 추계인구. <http://www.kosis.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평생교육법
17개 시도별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홈페이지, <http://www.ganghwa.incheon.kr>.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페이지, <http://www.gyeyang.go.kr>.

인천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gu.incheon.kr>.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

인천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icdonggu.go.kr>.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홈페이지, <http://www.ongjin.go.kr>.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icjg.go.kr>.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2011).

인천광역시청 인천통계, <http://www.incheon.go.kr>.

인천평생교육진흥원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www.damoa.incheon.kr

IDI연구보고서 2014-25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향
: 정책과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인 남기명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404-190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인쇄소 청송출판인쇄사(032-883-4437)

© 인천발전연구원 2013

ISBN 978-89-5678-524-0 9337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